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年 2月

碩士學位論文

中國의 外國人投資政策變化에
따른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戰略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林 海 濤

中國의 外國人投資政策變化에
따른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戰略
研究

A Study on the Investment Strategy of Korean
Enterprise to China according to the Change of
China's Investment Invitation Policy

2011年 2月 25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林 海 濤

中國의 外國人投資政策變化에
따른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戰略
研究

指導教授 李 城 旻

이 論文을 經營學碩士學位 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0月 20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 易 學 科

林 海 濤

林海濤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_____ 李延浩 _____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_____ 金錫珉 _____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_____ 李城旻 _____ (印)

2010年 11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2장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의 구조와 변화	6
제1절 외국인 투자정책의 구조	6
1. 외국인 투자정책 개요와 특성	6
2. 법률체계와 관리기관	8
제2절 외국인 투자정책의 발전과정	11
1.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조성단계	11
2. 외국인 투자유치 발전단계	12
3.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단계	14
4. 외국인 투자유치 조정단계	14
제3절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 분석	16
1. WTO가입 이후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정책	16
2. 11차 5개년 계획과 외자이용 11.5 계획	19
3. 최근 중국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 분석	24

제3장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현황 및 문제점	35
제1절 대 중국 외국인 투자현황과 전망	35
1. 대 중국 외국인 투자 현황	35
2. 대 중국 외국인 투자 구조	36
3. 대 중국 외국인 투자 전망	40
제2절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현황	42
1.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 추이	42
2.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 현황	44
3.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 전망	50
제3절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의 문제점	51
1. 중국 투자환경에 기인한 문제점	51
2. 한국 투자기업에 기인한 문제점	57
제4장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 활성화 전략	64
제1절 전략수립을 위한 SWOT 분석	64
1. 기회·위협요인 분석	64
2. 강·약점 분석	68
제2절 대 중국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	70
1. 생산원가 절감형 투자전략	70
2.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전략	74
3. 투자업종 다각화 전략	82
4. 연구개발 투자전략	84
제5장 결 론	85

참고문헌91

《표목차》

<표 2-1> 투자금액별 외국인투자 허가부서	10
<표 2-2> WTO가입이후 중국의 외국인 투자관련 주요정책	17
<표 2-3>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추진 주요 정책내용	20
<표 2-4> 외자이용 11.5 계획의 주요내용	23
<표 2-5>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2007)의 변경 내용	25
<표 2-6>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개혁 개편내용	30
<표 2-7>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노사정책 추이 변화	31
<표 3-1> 국가별 대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37
<표 3-2> 대 중국 단독투자 증가 추이	38
<표 3-3> 한국기업의 지역별 대 중국 직접투자 현황	45
<표 3-4> 한국기업의 업종별 대 중국 직접투자 현황	47
<표 3-5> 한국기업의 기업규모별 대 중국 직접투자 현황	48
<표 3-6> 한국기업의 투자목적별 대 중국 직접투자 현황	49
<표 3-7> 한국기업의 중국 경영환경 최대 리스크 요인	60
<표 3-8> 한국기업의 중국사업 철수 시 애로사항	61

《그림목차》

<그림 2-1>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체계	9
----------------------------------	---

<그림 3-1> 대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35
<그림 3-2>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43

ABSTRACT

A Study on the Investment Strategy of Korean Enterprise to China according to the Change of China's Investment Invitation Policy

Lin Hai-Tao

Advisor : Prof. Lee Sung-min. Ph.D.

Dep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Since initiating economic reform and liberalization policies in 1979, China promoted various complimentary policies in order to induce foreign capital introduction, So many counties have made effort to enter the Chinese market especially in the field of goods and investment. China has become a center of world economy. China joined the WTO in 2001, 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s in China increased rapidly, At the same time, China consumption market is changing markedly as high growth which is over average 9% yearly and it is estim ated that it will be jumping more by keeping 2008 Beijing Olympic game and 2010 Shanghai trade exhibi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China which has cheap wages and huge

market began as Korea company begin to concern about the foreign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investment concentration of foreign companies owing to huge market scope and geographic adjacency. And China investment of Korea is increasing markedly since Korea-China formal amity. It's a pity that although Korea companies made inroads into the China market. But it's failed compared with the beginning anticipation or takes a liquidation procedure and so on.

Recently, due to tax evasion and outflow of national wealth, trade friction, causing inequality between industries and regions, creation of ill feeling toward discrimination of domestic enterprises and etc, therefore Chinese government changed the basis of foreign investment policies not to increase only the mount of investment but to seek quality efficiencies in mobilizing investment. In "11th 5-yea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rogram(2006~2010)" Chinese government specifies the various plan for foreign investment, such as imposing the strict rules for reduction and exemption of tax, promoting efficiencies and diversity in use of foreign capitals and enforcing technological transfer and R&D investment.

The change of Chinese government's policy, which has already changed the business environment to invest in China or the plans to enter China, is an important variable for Korean enterprises. In addi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investments and maximize the investment profits from the standpoint of enterprises, the contents of changing policy should be analyzed accurately and the creation of investment activation strategy is practically needed. For strategies creation, this study includes the investment strategies of saving production costs which is based on SWOT analysis, investment

strategies of plans to enter domestic market, investment strategies of sector diversification, investment activation strategies of Korean enterprises investing in China which is subdivided into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strategie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 3대 외국인투자 유치국가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이 변하고 있다. 높은 저축과 경상수지 흑자로 투자재원이 풍부해지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기조는 과거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세금감면 축소와 세무조사 강화'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적용되던 다양한 조세 감면 조치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둘째, 중국시장에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외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하여 2008년 '반독점법(反壟斷法)'을 제정하였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전세계적으로 연간 100억위안 이상, 중국 내에서 연간 4억 위안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기업은 타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감독 강화'도 주요 정책변화 중 하나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해 중국정부는 협조 또는 방임해 왔으나 최근 노조설립 압력, 단체협약 체결 요구 등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기술이전 및 R&D투자 요구 증가'이다. 중국 정부가 1990년대 이래 추진해온 '시장과 기술교환(市場換技術)' 전략이 시장만 내주고 기술을 얻지 못했다고 평가됨에 따라 선진기술 이전, 연구개발센터 설립 등을 투자 허가시 조건으로 요구하는 한편 기술이전시 더욱 큰 혜택을 주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특혜제공에 대한 중앙정부의 견제'이다. 과거 중국의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세율 추가인하, 공장부지 임대 제공 등 우대정책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세수 감소와 무분별한 공업단지 확대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일련의 특혜제공 행위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한 내국인대우원칙을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시장경제체제의 강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특혜 축소나 감독 강화가 사업환경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과 진출전략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의 급변에 따른 정부와 산업계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국인투자정책의 본질과 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되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연구의 범위와 대상을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두고 이를 토대로 대중국 투자활성화 전략을 도출해 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달성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의 구조와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관련 법률체계와 관리기관을 파악함과 동시에 중국 외국인 투자정책의 발전과정과 WTO가입이후 외국인투자 관련 핵심정책인 경제개발 11차 5개년 계획과 외자이용 11.5 규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둘째,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의 변경내용, M&A규제와 세무관리 정책, 노무관리 정책, 기술이전 및 R&D투자 요구, 환경관련 규제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최근 중국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현황과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현황을 다각

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투자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한다.

넷째,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변화와 대중국 투자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 달성을 통하여 이미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물론,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게 대중국 투자 전반에 걸쳐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중국진출에 기여하고자 하며, 나아가 한·중 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그 동안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거대시장 등의 이유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왔으며,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과 함께 2008년 북경 올림픽 개최, 서부지역 대개발에 따른 투자수요 증대 등으로 한국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의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내수시장은 이미 상당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다국적기업들과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동안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투자에 실패하거나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사전 충분한 조사와 치밀한 계획 수립의 미흡, 경쟁력 있는 현지 사업전략의 부재 등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세계기업들의 전시장 이 되고 있는 거대 중국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 철저한 투자환경 조사 및 분석과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 동안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투자와 관련한 연구는 지역별 또

는 업종별 연구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이것은 그 동안 중국내 투자여건의 제약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투자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투자와 관련한 연구도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양적으로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전략의 수립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범위를 최근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투자에 따른 기회·위협요인들을 도출하고, 아울러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강·약점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투자에 필요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대중국 직접투자와 관련된 문헌연구의 방법을 주로 택하였으며, 분석에 이용된 문헌자료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정립 및 선행연구 검토를 위하여 해외직접투자 관련 국내외·서적, 학위논문 및 학술지논문을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등 유관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연구보고서, Issue Paper, 동향보고서 등을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용된 통계자료는 주로 한국무역협회 통계베이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중국 상무부 통계자료, 중국통계연감 각년호 등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연구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배경 및 주요 연구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논문의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은 중국 외국인투자정책의 구조와 변화추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서 제1절에서는 중국 외국인투자정책의 특성과 관련 법률체계 및 관리기관을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중국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중국 외국인투자정책의 발전과정을 연대기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

다. 제3절은 제2장의 핵심내용으로서 중국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WTO가입이후 외국인투자 관련 핵심정책인 11차 5개년 계획과 외자이용 11.5 계획 중 외국인투자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고찰하였으며, 중국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의 일차적인 시그널로 인식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목록’과 M&A규제와 세무관리 정책, 노무관리 정책, 기술이전 및 R&D투자 정책, 환경관련 규제정책 등의 변화내용과 전략적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제1절과 제2절에서는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현황을 국가별, 업종별, 지역별, 투자방식별로 파악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을 지역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투자목적별로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문제점을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에 기인한 문제점과 한국 투자기업에 기인한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본 연구의 제2장과 제3장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하여 전략수립을 위한 SWOT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제2절에서는 대중국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생산원가 절감형 투자전략,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전략, 투자업종 다각화 전략, 연구개발 투자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전반적으로 요약·정리하였다.

제2장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의 구조와 변화

제1절 외국인 투자정책의 구조

1. 외국인 투자정책 개요와 특성

가. 중국 외국인 투자정책의 개요

중국이 외자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말이다. 노선전환은 1978년 12월에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와 제3회 전국회의를 통하여 자금과 기술 부족을 대체하기 위한 대외차관과 외자도입에 길을 개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중국정부는 개방과 외자도입체제 구축 없이 해외 직접투자의 대규모 도입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외자도입 체제의 확립에 힘을 쓰게 되었다.

1978년 말 중국정부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 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 양적 확대에 주력하였다. 중국정부는 당시 열악한 투자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특구의 설치와 세율인하, 수출장려책 등 각종 우대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정책에 힘입어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1992년 이후 그동안 5개 경제특구에 국한되었던 우대조치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크게 증가하였고, 1990년대 중반까지 외국인투자의 양적 확대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 2001년 말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정책을 재조정하여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이 변하고 있다. 높은 저축과 경상수지 흑자로 투자재원이 풍부해지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의 필요성이 줄어들었

고,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기조는 과거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¹⁾

나. 중국 외국인 투자정책의 특성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외국기업의 선진설비와 기술 도입을 통한 국내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중국 정부는 부족한 자본과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획득하기 위해 1980년대 개혁개방정책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기업 및 선진기술에 대한 우대정책의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반적 우대정책은 업종, 수출, 산업단지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시되며, 설비와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감면 및 기업소득세 감면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또한 각 지방정부에서 외자 유치에 위한 토지 무상공급, 전력, 용수 공급, 지방세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외자정책은 우대와 규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양면성은 두 개의 요인으로부터 유추가 가능하다. 첫째는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기인하는 것, 둘째 중국의 정치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78년부터 점진적으로 외자우대정책을 펴왔지만, WTO 가입에 의해서 보다 많은 분야의 시장개방을 재촉 당하게 되었다. WTO 가입에 의해서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자국 산업의 기술이전 확대기회를 얻은 것과 동시에, 격렬한 경쟁에 자국의 산업이 휘말려 들어가는 이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 하나의 요인인 정치체제의 문제에 관해서는, WTO의 가입으로 인한 규

1) 정상은박승호, “변화하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CEO Information」 제562호, 삼성경제연구소, 2006.7, pp.1-4.

제완화와 시장개방으로 중국의 외자기업과 국내 산업에 경쟁력은 생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의 잉여노동력을 흡수하고 있던 국영기업의 도태 또는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국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에 대한 지배권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정부는 아직도 당과 정부가 중요한 기업과 산업을 지배한다는 기본 노선에는 변화를 주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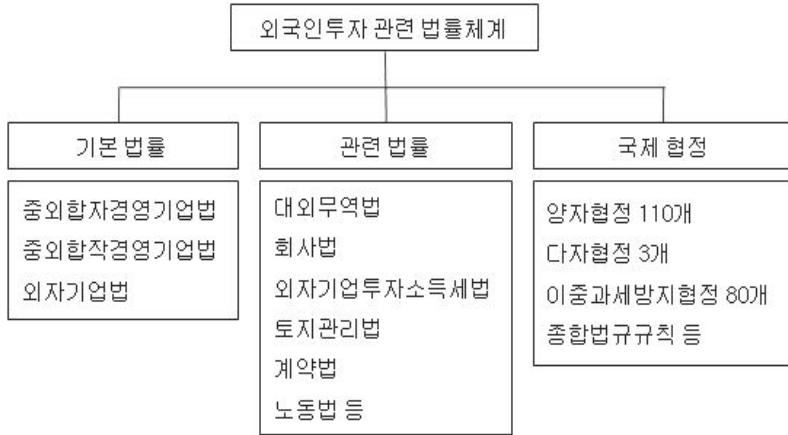
이러한 사정으로 중국의 외자정책은 WTO 가입을 계기로 대폭적인 개편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상존하는 두 개의 요인, 즉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직접투자, 정치체제와 직접투자의 관계라는 내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외자정책 체제가 다변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법률체제와 관리기관

가.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체제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 후에 1992년부터 시장경제시스템을 서서히 정착시키면서 경제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WTO 가입을 기점으로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법제도의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어져 왔으며, 오늘날 이미 법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그림 2-1>과 같이 갖추어진 상황이다.

<그림 2-1>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체계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유관법률은 안전생산법, 환경보호법, 투자유치표준법, 세금징수관련법, 상표법, 해관법, 회계법, 은행법, 전신법, 특허법, 저작권법, 공회법(노동조합법), 담보법, 보험법, 통계법 등이 있다.

또한 종합법규 및 법칙으로 외국인투자생산지도목록, 중서부지역우세생산목록, 국무원외국인투자장려목록, 외국인투자기업청산방법, 외사등록관리조례, 합자기업방출자규정, 외환관리조례, 외자통계제도이용, 외국투자자M&A규정, 외국인투자성회사규범, 외국인투자주주권변규정, 외국인투자경제투자규범, 서비스무역전문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²⁾

한편 중국에서 기존의 입법체제는 복잡한 등급과 무질서한 체계 등으로 오래 전부터 그 등급을 축소하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투자법체계는 통상 헌법차원규범, 국가규범, 지방규범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WTO 가입 후 외국인투자관련 법률의 정비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되었고, 중국정부는 관련 법률체계를 정비하였다. 단, 지방정부의 외자우대 조치가 중앙정부의 정책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지방의 문제가 있는 법률은 앞으로 계속 정비해 가야 할 것이다.

2) 호경암,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의 현황과 향후 전망”, 「Korea-China Economic Forum」 제05-1호, KIEP 북경사무소, 2005, pp.5-6.

나.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리 기관

중국의 외국인투자 허가기관은 투자금액 규모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에서 지정한 업종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경제에 중요한 항목이거나 3,000만 달러 이상 투자 항목 중 법률과 행정에서 제한하는 업종은 중앙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또는 국무원의 관계부처가 별도 심사하여 허가한다. 이와 달리 3,000만 달러 이하 투자는 원칙적으로 성(省)정부에서 허가하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에서 제한하는 업종은 국무원의 관계 부처와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표 2-1〉 투자금액별 외국인투자 허가부서

투자액	주관 부서
3,000만 달러 이상 제조업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
3,000만 달러 이상 중 장려업종	국무원의 관계 부처
3,000만 달러 이하 중 장려, 허가업종	성급 행정단위, 계획 단위 시
3,000만 달러 이하 중 제한업종	국무원 관계 부처, 쿼터와 허가증 관련 부분은 우선적으로 상무부 허가를 취득

자료 : 탁세령,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진출 관련 시사점”, 「수은해외경제」 제25권 제6호 통권 제284호, 2006, p.10.

외자기업은 반드시 심사기관이 허락한 기한 내에 중국국내에 투자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그 기업의 영업허가증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2절 외국인 투자정책의 발전과정

1979년 중국정부가 대외개방정책과 경제개혁을 실시한 이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그 동안의 고도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중국정부가 추진해 온 외국인투자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보면 개혁·개방정책의 추진과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세계무역기구(WTO)가입 그리고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등 주요 정책적 변화를 계기로 해서 다음의 4가지 단계를 구분해 볼 수 있다.³⁾

1. 외국인투자유치 기반조성단계(1979~1991년)

1979년 대외개방과 함께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대외개방지역의 지정 등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자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화교권이 투자하기 시작했다. 1979년 중국 정부는 기술도입과 외자도입, 수출 확대 등의 방침에 따라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0년대 중반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 실시조례」 등의 정비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미흡과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당시의 외국인 투자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후 중국정부

3) 조현준은 중국 FDI유치정책의 전개과정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고 있다. ① 시작 및 초기성장단계(1979~1991) : 1978년 대외개방과 함께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대외개방지역의 지정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강화, 경제특구 를 중심으로 화교권의 투자, ② 고속성장 및 조정단계(1992~1997) : 1992년 남순강화 이후 대외개방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중국의 세계시장과의 접촉이 확대되면서 외자유치액이 빠른 속도로 크게 증가 함, ③ FDI 정책의 재조정 및 개방심화단계(1998~2001) : 대외개방 진전으로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연계가 심화됨에 따라 국무원은 새로운 외자유치정책 및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 ④ 외자유치의 글로벌화 발전단계(2002년 이후) : 중국의 WTO 가입과 올림픽 유치의 성공은 중국의 시장개방과 시장경제체제 정비 가속화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 옴(조현준, “중국 FDI 정책의 목표; 전개, 성과 및 과제“, 「국제지역연구」 14권 3호, 국제지역학회, 2005, pp.8-16).

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하여 1986년 「외국인 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제품수출형, 기술선진형 외국인 투자기업에 보다 큰 혜택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법령과 규칙의 정비,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로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시켰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8년 말부터 약 3년간 중국이 정치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치리정돈(治理整頓)'⁴⁾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개혁·개방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2. 외국인투자유치 발전단계(1992~2001년)

중국정부는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⁵⁾ 이후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기반한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점진적인 시장화를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대외개방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중국과 세계시장과의 접촉이 확대되면서 외자유치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경제구축'이라는 개혁 목표를 확립하고 대외개방을 가속화하여 연해지역 외에도 연강(沿江), 연변(沿邊)지역으로 대외개방 지역을 확대하였다. 1995년

4) 1988년 9월 중국공산당 13기 3중전회의에서 채택된 치리정돈 정책은 본래 개혁·개방 10년 동안 누적된 경제상의 제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아래 출발하였다. 그러나 1989년 6월 천안문사태 이후에 이 정책은 체제안정 및 보수파의 세력강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5) 조자양은 제13차당대회에서 報告를 통하여 현 중국의 사회적 단계는 社會主義初級段階라고 규정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중요한 논점을 계급투쟁에서 경제 건설로 돌려놓음과 동시에 이제는 계급투쟁을 위시한 사상논쟁을 중요시 할 때가 아니고 생산력의 발전에 대해 연구, 실천해야 할 때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공유제를 주체로 여러 경제요소와 다양한 경영방식', '전민소유제에 있어서 정기분리', '다양하고도 정확한 분배원칙', '상품경제 발전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배양' 등 낙후한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국가의 개혁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경제제일주의가 국가 건설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생산력의 발전이 국가의 제일의 과제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에는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을 제정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장려, 허용, 제한, 금지 등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속한 성장을 나타내었고,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평균 규모확대, 외자기업의 비중증대, 유럽, 미국, 일본 등 대량투자국의 비중상승, 외자유치방식도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과 증권시장을 이용한 투자 등 새로운 투자방식이 출현하는 특징을 보였다.

1996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우대정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가공무역방식을 통한 조세의 회피 또는 포탈을 방지토록 하는 등의 조세감면정책을 재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자유입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기도 하였으나, 외자유치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 외국인 직접투자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건당 투자규모도 증대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의 기술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1997년에 발생한 주변국가의 금융위기는 중국경제 전반과 외자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발전방향에 맞는 외자유치의 질적 중시로의 전환과 함께 1999년 「외국인투자상업기업시행방법」을 제정하여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개방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2000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장려하고, 중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였으며, 서비스 산업분야의 점진적 대외개방 확대와 유통업, 대외무역, 금융, 보험, 증권, 통신, 관광 등 외국인 투자분야 및 투자방식의 확대와 다양화를 모색하는 등 외자유치 증대를 위한 새로운 외자유치정책들을 추진하였다.

3.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단계(2002년~2005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시장개방의 압력에 따라 중국정부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조정, 하이테크발전 등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즉 외자도입을 단순한 자본의 보충으로부터 기술도입, 산업구조 고도화, 국제경쟁력 증강 및 국제 분업 등으로 전환하고, 국유기업과 금융체제 개혁의 가속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01년 12월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 외자(독자)기업법, 중외합자기업법, 중외합작기업법(통상 三資企業法으로 칭함)을 개정하여 과거 수출의무조항, 중국제품 사용조항, 외환평형의무조항 등을 모두 철폐하였으며, 2002년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정비하여 외국인투자 장려영역의 확대와 제한영역의 축소, 외국기업의 R&D센터 유치, M&A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WTO가입은 중국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편입과 과거 20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불러왔다. 그리하여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 최대의 자본투자시장으로 발돋움하여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를 크게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 외국인투자유치 조정단계(2006년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 3대 외국인투자 유치국가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이 변하고 있다. 높은 저축과 경상수지 흑자로 투자재원이 풍부해지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

국의 외국인투자정책 기조는 과거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세금감면 축소와 세무조사 강화'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적용되던 다양한 조세 감면 조치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둘째, 중국시장에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외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하여 '반독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94년부터 추진되었으나 10년 이상 지연된 반독점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배경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감독 강화'도 주요 정책변화 중 하나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해 중국정부는 협조 또는 방임해 왔으나 최근 노조설립 압력, 단체협약 체결 요구 등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기술이전 및 R&D투자 요구 증가'이다. 중국 정부가 1990년대 이래 추진해온 '시장과 기술교환(市場換技術)' 전략이 시장만 내주고 기술을 얻지 못했다고 평가됨에 따라 선진기술 이전, 연구개발센터 설립 등을 투자 허가시 조건으로 요구하는 한편 기술이전시 더욱 큰 혜택을 주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특혜제공에 대한 중앙정부의 견제'이다. 과거 중국의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세율 추가인하, 공장부지 임대 제공 등 우대정책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세수감소와 무분별한 공업단지 확대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일련의 특혜제공 행위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한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시장경제체제의 강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혜 축소나 감독 강화가 사업환경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도 사실이다.

제3절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 분석

1. WTO가입 이후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정책

WTO가입 이전 중국의 외자유치정책의 목적은 국내의 부족한 생산요소(자본, 기술, 경영노하우)와 수출기술시장을 확보하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WTO가입 이후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과도한 외국인 투자에 의존적 경제구조와 불균형적 외국인 투자 유입에 따른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외국인투자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산업정책과 외국인 투자정책의 철저한 연계를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업종과 에너지 및 자원 다소비형 투자는 제한하고, 신기술 또는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선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⁶⁾ 중국은 자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었으나, 그 결과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최근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가 급증하면서 위안화 절상압력이 높아지고, 수출제한조치·반덤핑 제소 등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대규모 무역흑자와 무역흑자에 따른 통상마찰의 주원인이 가공무역 때문이며, 가공무역의 주체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가 중국 내 산업 간·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고정자산 투자과열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국정부가 추진해 온 ‘시장-기술의 교환정책’이 중국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축적이 아닌 외국기업의 시장장악만 초래하는 등 외국인 투자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를 크게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WTO가입 이후 5년간 중국의 연평균 외국인 투자계약 건수는 4만 여건으로 이전 4년간 평균(433억달러)보다 34% 증가하였다.

6) 양평섭·구은아, “중국의 WTO가입 5주년 결산-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07-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7, p.90.

<표 2-2> WTO가입이후 중국의 외국인 투자관련 주요정책

일 자	주요 내용
2003.03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의 인수 잠정규정’(外國投資者并購境內企業暫行規定):인수 요건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에 따름
2004.11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指導目錄):장려분야 축소, 첨단기술분야 중심유치
2006.02	국무원의 ‘장비제조업 가속 진흥에 관한 몇 가지 의견’(關於加快振興裝備製造業若干意見):대형핵심장비 기업 경영권의 외국자본 이전 시에 국무원 관련부서의 의견 청구
2006.06	상무부의 ‘중국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억제 보고서’(中國產業外資控制報告):선진기술확산, 경영관리와 마케팅 기업 이전 등의 효과미흡 결론
2006.08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并購境內企業規定):국가주요업종, 경제안전위협, 유명상표, 전통명가기업(老字號)등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 장악 시 상무부에 보고; M&A 관련독과점 규제로 중국내 자산 30억 위안, 인수기업의 매출액 15억 위안, 시장점유율 20%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합병 후 시장 점유율 25%일 경우상무부에 보고
2006.11	11차 5개년 기간의 외자이용계획(利用外資十一五規劃):외자의 양적 추구에서 질적 추구로 전환; 첨단기술, R&D분야, 환경보호, 자원절약형분야, 서비스분야, 중서부지역투자, 외자의 국가기간산업 M&A에 대한 심의강화, 외자의 부동산 개발 관리강화 등
2007.03	2007년 외국인 투자유치 지도의견(關於全國吸收外商投資工作指導性意見):외국인 투자유치의 질적 수준 제고, 선진기술, R&D분야, 환경보호, 자원절약형분야, 중서부지역투자
2007.11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 개정: 대체에너지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관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유치하는 한편, 부동산개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유치 억제
2009.06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并購境內企業規定): 국가 주요 업종, 경제안전 위협, 유명 상표, 전통명가 기업(老字號)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 장악 시 상무부에 보고; M&A 관련 독과점 규제로 ㉠ 중국 내 자산 30억 위안, ㉡ 인수기업의 매출액 15억 위안, ㉢ 시장 점유율 20%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합병 후 시장점유율 25%일 경우 상무부 보고
2010.04	‘외자이용 개선에 관한 국무원 의견’ 발표: 외자의 고급제조업, 첨단기술산업, 현대서비스업, 신규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며, 반면 ‘2고 1資(고에너지소모와 고오염 및 자원성)’와 저수준, 과잉생산력 확장 유형 항목은 엄격히 제한
2010.4	‘중국 중부지역 외국인투자 촉진계획’ 발표: 제조업 외자 중점 유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합자기업 형태 투자 장려,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외자 중점 유치, 해외투자가 활발한 경제발전 지역, 다국적 기업 및 대만·홍콩·마카오·일본·한국의 중소기업 등의 투자 중점 유치

자료 : 중국 상무부(<http://mofcom.gov.cn>).

그러나 WTO가입 이후부터 2004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중국의 외국인 투자 증가추세가 2005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06년 2월에도 전년 대비 4.5% 증가한데 그쳤다. 특히 2006년에는 간접투자를 포함할 경우 중국의 외국인 투자액은 695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인식으로 중국은 외국인 투자정책을 양적확대보다는 질적효율성을 증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WTO가입 이후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에 의존적인 경제구조와 불균형적인 외국인 투자 유입에 따른 구조적인 모순을 해소하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맞추어 외국인 투자환경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지렛대로 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2006년 들어 제11차 5개년 계획과 새롭게 제정된 노동법은 투자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제11차 5개년 계획이 제창하는 「인본주의를 위주로 전면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중국의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투자기업의 관심은 수익성과 관련된 조세정책의 변화와 환경정책의 변화에 쏠리고 있다.

2006년 11월에는 '11차 5개년 기간의 외자이용계획(利用外資十一五規劃)'을 발표하고 외자의 양적 추구에서 질적 추구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첨단기술, R&D분야, 환경보호, 자원절약형분야, 서비스분야, 중서부지역투자, 외자의 국가기간산업 M&A에 대한 심의강화, 외자의 부동산 개발 관리를 강화하였다. 2007년 11월에는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을 개정하여 대체에너지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관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유치하는 한편, 부동산개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유치를 억제하였다. 2010년 4월에 들어서는 '외자이용 개선에 관한 국무원 의견'을 발표하여 외자의 고급제조업, 첨단기술산업, 현대서비스업, 신규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며, 반면 "2高 1資"(고에너지소모와 고오염 및 자원

성)와 저수준, 과잉생산력 확장 유형 항목은 엄격히 제한하였다.

2. 11차 5개년 계획과 외자이용 11.5 계획

가. 경제개발 11차 5개년 계획의 개요

중국은 현재 지난 20년간 중국 경제발전의 주 이론이었던 ‘선부론’에서 탈피해 ‘공부론’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덩샤오핑이 주창한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부터 앞서 나가고 나머지는 따라 간다’는 선부론은 1979년 개혁과 개방이후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논리였다. 그러나 중국의 계층 간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중국정부는 선부론에서 탈피해 ‘모두가 부유해지자’는 공부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06년부터 시작된 11차 5개년 계획의 슬로건 ‘화해사회건설(和諧社會建設)’과 맥을 같이 한다. ‘화해사회’는 도·농간, 지역 간 발전의 조화, 사람과 환경의 조화 등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한다. 2007년에 선출된 후진타오 제2기 지도부는 2008년부터 질적 성장을 위한 개혁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⁷⁾

중국은 1953년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왔는데 1992년 개혁개방을 중국전역으로 확대하기 이전까지는 주로 자력갱생에 기초한 생산물의 자급자족에 역점을 둔 경제정책이 기본이었다. 이에 따라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5개년 시기는 구소련으로부터 제공받은 156개 프로젝트 건설에 치중하였고 2차 5개년 시기는 철강 등을 영국과 미국보다 많이 생산하는 양적 성장 목표에 집착하였다.

7) 김주영,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최근 정책 방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동북아팀, 2007, pp.1-14.

〈표 2-3〉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추진 주요 정책내용

계획기간	주요 내용	비 교
제 1 차 (1953~19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소련이 제공한 156개 프로젝트 및 이에 기초한 694개 중대형 공업프로젝트 건설 추진으로 사회주의 공업생산 구조형성 · 농업,수공업 분야의 사회주의 생산체제로 전환 	급격한 사회주의 체제전환으로 재정압박
제 2 차 (1958~1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공업 중심 공업화 ·全民 소유제, 집단 소유제 공고화 · 철강 등 공산품의 영미추월 목표설정 	대약진 운동
제 3 차 (1966~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공업,중공업 순으로 발전시키되 농업발전을 통한 의식해결에 역점 · 자력갱생 기초 하에 국방건설을 위한 공업육성 · 전쟁대비 三線건설강화 	구소련과 국경분쟁으로 전쟁준비
제 4 차 (1971~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대비 삼선 건설 및 연해지역 공업기반 건설을 통한 초보적인 수준의 독자적인 공업기반 구축 · 농업발전 최우선 · 6개 경제권역(화둥, 화남, 화북, 서남, 서북, 동북)건설 	전쟁대비 공업과 국방강화
제 5 차 (1976~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적인 공업기반 구축을 위한 120개 대형프로젝트 및 철강(10개), 비철금속(9개), 석탄(8개), 유전(10개) 기지건설 · 거시경제 조정과 개혁 제기 	양적성장
제 6 차 (1981~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 공급확대 · 기술교체 및 에너지 소비절감 · 경제발전을 위한 외자유입과 선진기술도입 	양적성장의 후유증해결에 역점
제 7 차 (1986~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 공급확대 · 고정자산 투자규모 조절 및 산업구조조정 추진 · 에너지, 교통, 통신, 원자재 공업발전 	경제성장의 질과 속도 중시
제 8 차 (1991~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와 공급 균형유지 속에 지역별 경제구조 동조화현상 억제 ·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 중대형 핵심기업 중심의 기술개조를 통한 선진국 수준 제품 품질확보 · 경영관리 시스템 개혁을 통한 기업경영활력부여 	개혁개방 확대에 대비 경제체제 개혁
제 9 차 (1996~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인 기업제도 모색 · 기계,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건설 등 기간산업 중심의 경제발전 동력원 육성 및 산업구조조정 추진 ·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방식 전환 추진 	공유제 중심의 다양한 소유제 인정
제 10 차 (2001~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산업화 등을 통한 농민소득 증대 ·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 발전
제 11 차 (2006~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경제성장방식 전환, 혁신능력 제고 · 지역협력발전을 조화로운 사회건설 	균형과 분배

자료 : 김주영(2007), 前掲論文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차와 4차 5개년 시기에는 구소련과의 국경분쟁으로 인한 전쟁대비를 위해 국방건설과 공업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5차에는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의 공업 육성에 그리고 6차에는 부족한 소비재 공급능력 확대에, 7차에는 소비재 공급확대정책에 따른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억제하는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8차에 들어서 중복투자억제 외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개방에 대비한 대외 경쟁력 확보에 9차에는 기계,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간산업중심의 경제발전 추진과 함께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보장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0차 5개년에는 지역 간·노동 간 격차 완화와 WTO 가입으로 인한 개방화에 대비해 농민소득 증대와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고도화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 육성, IT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11차 5개년 계획⁸⁾에서는 주요 추진과제를 농촌개혁, 공업구조 고도화, 에너지공업, 원자재공업, 경공업 및 방직공업 정보화 추진, 서비스업 발전, 지역 균형발전 및 도시화 추진, 환경보호와 자원관리, 과학기술 개발, 대외무역과 외자 이용의 질적개선 및 해외투자 확대, 생활수준 향상 등에 두고 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추진방향인 12차 5개년(2011-2015년)계획을 집중 논의하고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12차 5개년 계획은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시진핑-리커창의 제5세대 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전의 계획이 '國富'에 초점을 맞춘 양적인 '경제성장'이었다면 12차 5개년 계획은 '民富'에 초점을 맞춘 질적인 '경제발전'을 강조하였다.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수준의 경제발전,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주민소득 증대, 사회건

8) 중국은 11차 5개년계획부터 '계획'을 '규획(規劃)'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는데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계획이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강제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 규획은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계획경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운용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설 가속화, 개혁개방의 심화를 발전목표로 제시하고 내수확대, 민생보장, 조화로운 지역발전, 추진, 산업구조조정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선정하였다.

12차 5개년 계획은 양적인 경제성장보다 균형과 분배를 강조하는 질적인 경제발전으로 전환을 추구하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임금의 지속적 인상, 농촌 소득 증대,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소득분배 제도 조정 등 민생보장과 개선이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⁹⁾

나. 외자이용 11.5 계획

중국 국가발전개혁 위원회는 2006년 11월 「외자이용 11.5 계획」을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와 외화차입 시 ‘양’에서 ‘질’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외자이용의 중심을 자금과 외환부족 보완에서 선진기술, 관리경험 도입과 고급인재 도입으로 전환하며, 생태계 건설, 환경보호, 자원·에너지 절약과 종합적 이용을 중시할 것임을 밝혔다.

중국정부가 외자도입정책에 대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및 중서부 개발 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한편, 외채에 대해서는 효율성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등에 역점을 둘 것임을 명시하였다.

9) 이봉걸, “중국 12차 5개년(2011-2015) 계획의 주요 내용과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Trade Focus」 9집 14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0.11, pp.1-24.

〈표 2-4〉 외자이용 11.5 계획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8대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를 통한 산업구조 개선 ·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건설 · 서비스업 개방 · 자주적인 창조혁신체계 확립 ·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추진 · 외자도입 다변화 · 외채이용의 질과 효율성 증가 · 외채의 관리감독 강화
외자도입 장려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농업,농업기계 개발 및 제조 · 전자정보,자동차,화학,석유화학 · 인프라,고속도로,항만,철도,오수처리,쓰레기처리 · 금융,지방은행,양로보험,의료보험,농업보험 · 서비스업 :정보통신,관광,물류,컨설팅

자료 : 양평섭·구은아(2007), 前掲論文, p.86.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외국자본 유치에 단순가공기업, 저부가가치 생산 제조단계에서 R&D, 디자인, 현대식 물류 등 선진기술 영역으로 확대 발전시켜 중국이 세계 고부가가치 상품의 제조기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둘째, 외자에 의한 특정 분야의 독과점 현상을 막고 중국 핵심기업 인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주권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 고부가가치 농업, 농업기계 개발 및 전자정보, 자동차, 화학, 인프라(고속도로, 항만, 철도, 오수처리, 쓰레기처리), 금융(지방은행, 양로보험, 의료보험, 농업보험), 서비스업(정보통신, 관광, 물류, 컨설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3. 최근 중국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 분석

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변경

중국은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를 통한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1997년 처음으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을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2002년, 2005년에 수정했다. 그리고 2007년 11월 수정 발표된 목록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¹⁰⁾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41개의 산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장려업종, 제한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41개 산업에 대해 262개의 장려업종과 75개의 제한업종, 34개의 금지업종을 지정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장려업종이 256개로 줄어든 대신 제한업종은 78개, 금지업종은 35개로 변화하였다.¹¹⁾ 2007년에는 351개, 87개, 40개로 변화하여,¹²⁾ 제한 및 금지업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11.5 경제규획’에서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와 농업, 영농시설 및 장비, 에너지 개발, 교통, 물류·발전 인프라 개발, 환경보호 등에 대한 투자 그리고 허가 분야의 생산품 중 100% 수출하는 투자사업 등을 장려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외에 WTO가입 시 개방을 약속했던 유통, 금융, 통신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방계획을 밝히고 있다. 중국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첨단산업 유치와 첨단설비 유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장려업종’ 또는 ‘국가첨단기술제품목록’에 해당되는 외자기업들이 수입하고자 하는 설비, 부품 중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중국 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밖에

10) 전주원,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변화”, 「ISSUE PAPER」, 산업연구원, 2008, p.35.

11) 박세근, “새로운 중국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2005.1.1 시행)”,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5, pp.1-33.

12) 김경환, “중국의 투자환경변화와 대응방안”, 「한중사회과학연구」 7권, 한중사회과학학회, 2006, p.4.

장려업종에 해당되는 외자기업들이 중국산 설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외산설비 수입 시 감면해주는 관세액과 부가가치세액 만금을 공제해주고 있으며, 외자기업들이 국가의 산업정책에 부응하여 생산설비를 개조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할 경우 구입한 중국산 제조설비액 범위 내에서 기업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¹³⁾

〈표 2-5〉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2007)의 변경 내용

구분	추가된 산업	삭제된 산업
장려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만kw 대형 순환유도층(CFB) 보일러 · 대형칼라 디스플레이 기기의 광학 엔진, 광원, 스크린, 고밀도 투영관과 LCOS 모듈 등 핵심부품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템프 코크스, 건조냉각 코크스 생산 · 아연도금 및 항내식성 알루미늄/아연합금강판, 칼라강판제조 · 고철 재활용 · 연산 30만톤 이상의 산화알루미늄 생산 · 오토바이 주요부품 제조:기화기(카뷰레터), 마그네트, 시동장치, 디스크 브레이크
제한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테마파크의 건설/운영 · 시장조사(합자, 합작에 한함) ·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배급, 영화제작 (중국측이 과반수 이상 지분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회사 음성 및 정보서비스의 2006년 12월 11일 이전 독자 가능 조건
금지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제작, 영화제작 (제한분야로 완화)

자료 : 탁세령(2006), 前掲論文, pp.16.

한편 중국 국무원은 2010년 4월 13일 외국인 투자 선별 유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외자이용 개선에 관한 국무원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⁴⁾

13) 탁세령,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진출 관련 시사점”, 「수은해외경제」 제25권 제6호 통권 제284호, 2006, pp.4-22.

외자유용 개선에 관한 국무원 의견의 주요 내용은 중국 경제발전 수요 근거, 국가 산업조정과 진흥계획 요구에 부합하여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수정을 언급하고 있다. 그 주요 정책방향은 외자의 고급제조업, 첨단기술산업, 현대서비스업, 신규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며, 반면 “2高 1資”(고에너지소모와 고오염 및 자원성)와 저수준, 과잉생산력 확장 유형 항목은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총 투자액이 3억 달러 이하인 장려 및 허가류 항목은 「정부에서 심사 비준하는 투자항목 목록」에 규정된 국무원 유관부문에서 심사비준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로 심사권을 이양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수정에 근거하여 「중서부지역 외상투자우세산업 목록」역시 수정하였다.¹⁵⁾ 그 골자는 동부지역 외상투자기업의 중서부지역으로 전이를 유도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정책개방과 기술자금 부가지원 역량 확대하는 동시 행정서비스 완벽화, 공상, 세무외화, 사회보험 등 업무편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¹⁶⁾ 또한 외자기업의 중국내 주식시장 상장 허용 및 지분참여, 인수 합병 등의 방식으로 중국기업의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된 제도의 정비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외자를 이용한 중소기업 담보회사 설립 작업 조속 추진 및 외상투자자들의 창업투자기업 설립 장려, 사모주권투자펀드를 이용한 퇴출메커니즘 완벽화, 금융기관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확대 유도 및 경내에서 인민폐채권의 발행 주체 범위 확대 등이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2010년 4월 29일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에서 중국 최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중국, <외국인투자 신규제안>발표 주요내용”, 「해외경제투자정보」, 2010.7.6, pp.1-3.

15)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2008)」은 중서부지역 투자 시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업종을 각 성(省)별로 분류해 놓았으며, 동 목록에 포함된 업종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투자 장려업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투자 장려업종에 해당되는 우대정책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음.(<http://bgt.ndrc.gov.cn/zcfb/W020081224616949201276.pdf>).

16) 정지현, “중부지역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10-2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8, pp.1-13.

초의 국가급 지역단위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인 「중국 중부지역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중부지역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의 기본방향과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부지역의 외국인투자 촉진업무는 반드시 중부의 경제적 위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장점 부각 및 단점 극복을 통해 해당지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한다. 둘째, 적극적인 외자유치 방침의 견지, 자본의 최적 배치, 기술 진보 촉진 및 시장경제시스템 완비 등 외자유치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중부 각 지역 간 분업과 협력의 조화를 이룬다. 셋째, 시장 및 투자자 지향적인 투자촉진기구를 설립하고 효율적인 투자촉진제도를 마련하여 외자유치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계획’의 최종목표는 중부지역 경제의 빠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중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해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첫째, 제조업에 대한 외자를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비즈니스·금융·과학기술·문화·의료·관광 등의 서비스업, 농부산물 가공업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유치를 확대한다. 둘째, 중부 각 성은 외자기업이 M&A, 지분 양도, 증권 투자, 매각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합자기업 형태로 투자할 것을 장려한다. 셋째, 중부지역의 주요 도시권(城市圈), 강 유역 및 교통이 편리한 도시, 성(省)급 이상의 경제기술개발구, 하이테크 개발구,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점 공업단지 등의 지역에 외자를 중점적으로 유치한다. 넷째, 서유럽·북미·아시아 등 해외투자가 활발한 경제발전 지역, 다국적 기업 및 대만·홍콩·마카오·일본·한국의 중소기업 등의 투자를 중점적으로 유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환경의 개선과 보장조치의 강화를 위하여 토지임대료, 행정수수료, 세수납부, 수도 및 전기가격 관련 우대정책과 중부굴기 및 산업이전 유치 관련 정책 등을 완비하여 투자자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투자환경 평가제도, 책임추궁제도 등 투자유치업무 및 투자효율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는 중부굴기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본과 기술 등을 외자를 통해 선별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개방 초기의 맹목적인 외자 유치 및 확장정책에서 향후 첨단 제조업, 현대서비스업, 신에너지 및 친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등 선별적인 외자유치로 정책이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나. M&A규제와 세무관리 정책의 강화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입방식의 전환을 추구하여 왔다.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다수의 부실국유기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산업구조 조정 및 고도화를 달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외국기업의 M&A 투자를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2000년 9월 중국기업 주식의 해외매각을 허용한 데 이어, 2003년 4월부터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잠정규정」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내 지분 및 자산을 M&A 방식으로 중국 국유기업의 소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¹⁷⁾

2003년 3월 국무원은 국유자산 감독 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185개 국가급 국유기업과 수천 개의 성급,시급 국유기업의 자산을 동 위원회에 넘겨 개혁 및 매각작업을 벌여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국유기업 지분을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특히, 노후한 국유기업이 밀집한 동북 3성 지역에서는 2005년 중반 이후 국유기업을 외자에 매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대외개방전략이 종전의 ‘시장으로 기술을 교환(以市場換技術)’하는 전략에 더하여 ‘경쟁으로 기술을 교환(以競爭換技術)’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의 변화에 기초를 두고

17) 박세근,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합병, 인수 규정”, 「해외경제투자정보」, 한국수출입은행, 2007, p.2.

이전의 생산기지 설립(greenfield)형 투자에 더하여 M&A형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전략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6년 8월 새로운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M&A에 관한규정」이 발표되었으며, 새로운 규정에서는 향후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특히 국유기업 및 지명도 높은 기업)M&A 시 인수가격의 적정성(국유자산평가)및 절차의 공정성 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와 관리가 이루어 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제우대 혜택이 과도하여 중국기업에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여론이 중국 내에서 높아지고 중국의 대규모 서부대개발계획, 동북 3성 진흥정책 등으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자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재정적자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최근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수 우대 조치를 축소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07년 11월 28일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중국내 기업과 동일한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초안’을 통과시켰다.

아래 <표 2-6>에서와 같이 외국인 기업에 적용해오던 기존 우대세율인 15%를 20-25%로 상향조정하여 기업 소득세(법인세율)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세무 당국은 중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세제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2006년 1월에 「국가 세무총국의 외국인 개인소득세 납세대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통지(國家稅務總局關於加強外籍人員個人所得稅檔案資料管理的通知)」를 발표하여 외국인이 취업하고 있는 기업들은 납세관리 대상을 작성하여 당국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¹⁸⁾

18) 황병우, “중국의 경영환경 변화와 지역 기업의 대응”, 「대구지역경제분석」 제207호, 대구은행, 2007, pp.52-61.

〈표 2-6〉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개혁 개편내용

구 분	현행	개편
기업소득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지방소득세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로 인하
기본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면세, 3년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우대정책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우대세제 · 주로 외자에 적용 기본세율30%, 본세율30% ·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등 경감세율15% · 중서부(내외자적용)경감세율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우대세제 · 주로 국내기업 · 소프트웨어기업 경감세율10% · 에너지교통 등 기반산업 경세율 15%; 존속 가능성 큼 ▪ 지역우대세율은 폐지 예정 ▪ 서부지역세제 혜택: 경감세율 15% 장기간계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우대 · 2免3減; 반도체산업, 소프트산업 · 5免5減; 인프라, 농업투자 · 재투자자의 세금환급; 외국기업 40% 환급 선진기술기업, 제품수출기업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우대 · 동북지구의우대정책 · 고정(무형)자산의 加速감가상각 공제가능한 과세임금기준의 인상 · 내용연수의 단축: 반도체산업 (5년→3년) · 연구개발비의 소득공제(50%)

자료 : 전주원(2008), 前掲論文, p.35.

다. 노무관리 정책의 강화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자기업에 대해 고용탄력성을 유지하고, 단체협약을 대행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사관계 감독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관리하여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노사분쟁 시 중립유지, 노조설립압력, 임금현실화 및 단체협약 요구 등 노동법에 입각한 예외 없는 정책 적용을 추구하고 있다. 2008년 1월 시행된 ‘신노동계약법’에는 노조설립의 의무화, 고용계약해지 및 중지 시의 보상, 파견근무 제한, 일정기간 경과 후 근로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시 하는 많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외자기업들에게 노동조합 성격의 공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노무관리강화에 나서고 있다.

‘신노동계약법’은 근로자 권익을 특히 중시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신노동계약법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제1조로 규정하고 근로자의 이익과 직접 연관된 규칙 및 제도 마련에 있어 반드시 노조 등 기구와의 평등한 협상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이 파견근무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반드시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경쟁사 취직에 대한 제한 기간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경쟁사 취업제한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 취직 제한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근로기준 향상을 통한 권익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새로운 법안이 인건비 상승 등을 불러와 사업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¹⁹⁾

<표 2-7>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노사정책 추이 변화

구 분	기존의 노사정책	노사정책 변화 방향
노사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사전 단속 우선 ▪ 단체행동 적극 봉쇄 ▪ 노조 未설립 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관계 관리 및 감독 중시 ▪ 노동계약제 등 노동법 집행에 대한 감독 강화 ▪ 노조를 설립하도록 압력행사
임금 및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인건비 유지에 초점 ▪ 낮은 최저임금 수준 유지 ▪ 사회보장제도는 탄력적으로 시행 (예외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및 복지 수준 제고 ▪ 최저임금제도 개편 및 인상 ▪ 단체협약을 통한 임금결정 ▪ 사회보장에 대한 예외 없는 적용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의 量중시 ▪ 노동집약적 외자기업 유치 ▪ 단기 고용 활성화를 통한 고용 탄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의 質중시 ▪ 퇴직금 도입, 장기근속자 우대 등 ▪ 기술·관리직 고용 유도

자료 : 정상은·박승호(2006), 前掲論文, p.11.

19) 정상은·박승호(2006), 前掲論文, pp.1-23.

라. 기술이전 및 R&D투자 요구 증가

개혁개방 이후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입이 중국의 기술 역량 강화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1990년대 이래 추진된 '시장과 기술 교환(市場換技術)' 전략으로 선진기술 보유기업들이 중국에 대대적으로 진출하였으며,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은 전자, 통신, 자동차, 의약 등의 분야에서 800여 개의 R&D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일부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선진기술 도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정부는 '시장과 기술 교환(市場換技術)' 전략이 애초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자성과 더불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연구개발 투자의 목적이 '기초 및 혁신연구'가 아닌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제품개발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단독투자 증가와 低부가가치 공정 위주의 생산시설도 기술습득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규제완화로 외국기업의 투자형태가 합자에서 단독투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술습득 기회는 더욱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정부는 공장 신·증설 시의 조건부 인허가 및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M&A를 통해 기술 유입을 활성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인허가시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센터 건립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기업이 선진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M&A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이에 대한 우대조치는 확대하고 있다.

마. 환경관련 규제정책의 강화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는 환경오염의 방지와 자연생태환경의 보호를 증시하여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고자 한다. 환경정책은 종전의 오염 후 복구에서 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예방위주의 종합적인 처리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각 부처는 엄격한 조치를 통하여 오염물배출총량을 억제하

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특히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오염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고 처리토록 하고 있다. 수자원 오염방지과 대도시 지역의 생활오염, 공업지역의 오염 및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오염에 대한 처리와 함께 이에 대한 제도정비를 추진하여 오염배출 총량제, 오염배출허가제 및 환경영향 평가제를 제정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자연생태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자원의 개발 시에는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불필요한 자원의 개발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자연자원의 생태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생태를 복구하는데 노력을 하고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자연생태가 속히 회복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발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생태보상시스템을 수립토록 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규와 제도를 대폭 제정할 것이고 이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위한 지출, 자연생태개발을 위한 개발 부담금의 지출 및 각종 환경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제재규정 역시 매우 엄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생산비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등 향후 기업의 생산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본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크게 악화될 것이다.²⁰⁾

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강화

그 동안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조세 등의 분야에서 비교적 큰 재량권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우대조치를 제공했다. 중앙정부도 이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방정

20) 김경환(2006), 前揭論文, pp.16-17.

부의 우대정책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크게 공헌하긴 했으나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

지방정부의 지나친 세제우대는 세수감소와 규제회피 풍조를 유발했다. 중앙정부는 개발구 정리, 기업소득세법 조정 등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우대정책 남용을 억제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합법적인 우대정책을 웃도는 조건을 제시하여 외자기업을 유치하였던 개발구를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법인세의 지역별 격차를 축소하고 세율 인하 등 직접적인 우대에서 공제 등 간접적인 우대로 전환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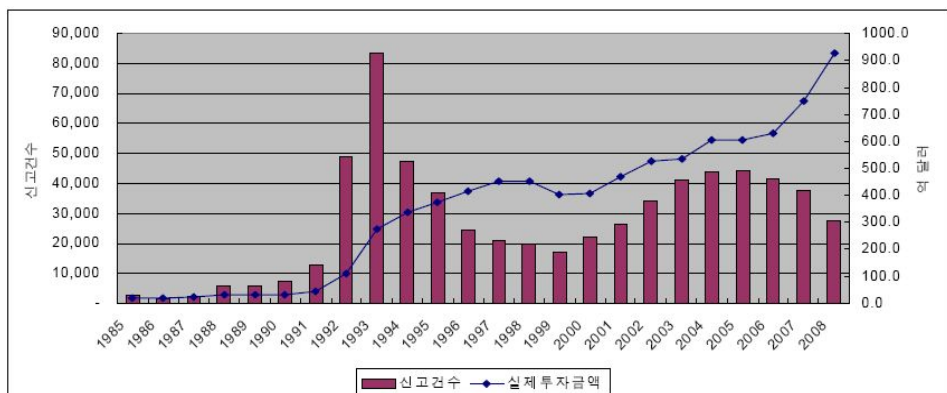
제3장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대 중국 외국인 투자현황과 전망

1. 대 중국 외국인 투자 현황

중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전 세계의 대 중국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1978-2004년 누계로는 대 중국 외국인투자 기업은 50만개를 돌파했으며 실제로 유입된 외자는 5,621억 달러였으며, 특히 2004년 중 투자기업 총수는 43,664개이며, 투자금액은 2003년에 비해 13.3% 증가한 606.3억 달러였다. 2008년 기준 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는 27,514건, 924.0억 달러로 전년대비 건수는 27.3%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2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2008년 하반기 경제위기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현실화되면서 2009년 들어 하락세가 본격화되어 2009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건수 및 투자액은 10,419건, 43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4%, 17.9% 감소하였다.

<그림 3-1> 대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자료 : 중국 상무부(<http://mofcom.gov.cn>).

2. 대 중국 외국인 투자 구조

가. 국가별 구조

최근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서 국가별 특징은 홍콩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2008년 기준 홍콩의 대 중국 투자는 2007년 대비 48%가 증가한 410.4억 달러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중국과 홍콩의 CEPA²¹⁾의 발효 등에 따라 서비스업의 대중국 투자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²²⁾ 2008년 홍콩의 대 중국 투자 410.4억 달러 중 서비스업 투자는 213.8억달러로 전체의 52.1%를 차지하였으며, 홍콩의 서비스 부문 투자는 중국에 유입된 서비스 부문 직접투자의 56.1%를 차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상위 10대 투자국 중 유일하게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투자 감소의 원인은 투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의 인건비 상승,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우대정책 철폐 등 투자환경 악화와, 위안화 환율 절상,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투자위축 등 외부환경의 악화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보인다.

건당 투자금액은 1999년까지는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5년 까지는 보합, 그리고 2006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건당 투자금액의 증가원인은 중소기업의 소규모 투자가 점차 감소하고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21)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의 약자로 2003년 체결하여 2004. 1.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홍콩제품의 중국 수출시 시계 등 품목의 관세 철폐와 컨설팅, 광고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2004년 CEPA 시행 이후 6차례에 걸친 보충협의로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범위와 정도가 높아지면서 홍콩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하였음.

22) 박세근, “최근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 「해외경제·투자정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9.8, p.2.

〈표 3-1〉 국가별 대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 억 달러)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2009. 1-6월
				금액	비중	증가율	
1	홍콩	202.3	277.0	410.4	44.4	48.1	200.0
2	버지니아군도*	112.5	165.5	159.5	17.3	-3.6	58.5
3	싱가포르	22.6	31.8	44.4	4.8	39.3	19.0
4	일본	46.0	35.9	36.5	4.0	1.8	20.3
5	케이먼군도*	21.0	25.7	31.4	3.4	22.3	15.8
6	한국	38.9	36.8	31.4	3.4	-14.8	13.5
7	미국	28.7	26.2	29.4	3.2	12.5	13.7
8	사모아*	15.4	21.7	25.5	2.8	17.5	11.8
9	대만	21.4	17.7	19.0	2.1	7.0	8.7
10	모리셔스*	10.3	13.3	14.9	1.6	12.1	6.6
11	영국	7.3	8.3	9.1	1.0	10.0	3.1
12	독일	19.8	7.3	9.0	0.9	22.7	5.1
13	네덜란드	8.4	6.2	8.6	0.9	39.8	4.3
14	프랑스	3.8	4.6	5.9	0.6	28.9	2.8
총계		630.2	747.7	924.0	90.4	23.6	430.1

주 : * 는 조세회피 지역

자료 : 중국통계연감 각 년도, 중국 상무부.

나. 업종별, 지역별 구조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서비스업의 비중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조업은 중국투자의 주요 분야로 2008년 499.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투자의 54.0%를 차지하였다. 다만, 제조업 투자 비중은 2004년 71.0%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에서 투자가 집중되는 분야는 ①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전자 설비 제조업 ② 전기기계 및 관련기자재 제조업 ③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④ 교통운수 설비 제조업 ⑤ 일반설비 제조업 ⑥ 전문설비 제조업 ⑦ 방직, 의류, 신발, 모자 제조업 ⑧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이며, 이들 분야가 2008년 제조업 투자의 65.8% 차지하였다. 한편 2008년 서비스업 투자는 381.2억 달러로 전체의 41.3%를 차지, 전년 대비 0.3% 포인트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홍콩기업의 투자가 많은 부분 차지하였다.

2007년 대비 투자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전력, 석탄가스, 수자원 생산 및 공급(17.0억 달러, 24.2% 증가), IT서비스(27.0억 달러, 83.9% 증가), 유통(35.4억 달러, 63.1% 증가), 운수서비스(27.5억 달러, 39.3% 증가) 등이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84.4%) 위주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부지역(8.1%)과 서부지역(7.2%)에 대한 투자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중부굴기(中部屈起)’, ‘동북진흥(東北振興)’ 등 지역개발전략에도 불구하고 중·서부지역은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지로서의 매력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부지역의 경우 투자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 반면, 서부지역의 경우 2000년대 초반 4%대에서 7%대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 투자방식별 구조

투자방식별로는 합작보다는 단독투자 선호되는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단독투자의 비중은 2001년부터 합작투자를 초과하기 시작하여 2008년 전체 투자의 78.2%를 차지하여 전년보다 1.7% 포인트 증가하는 등 단독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2〉 대 중국 단독투자 증가 추이

구 분	2000	2001	2005	2006	2007	2008
단독투자 비중	47.3%	50.9%	71.2%	73.4%	76.5%	78.2%

자료 : 중국통계연감 각 년도.

단독투자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① 투자경험 누적으로 기업들의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② 합작투자가 기업문화 차이로 의견충돌이 잦은 등 쌍방이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반면, 단독투자는 이러한 제약이 없어 경영 성과가 상대적으로 빨리 나타나며, ③ 기술유출 방지 등 지적재산권 보호가 용이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규제, 중국 내부의 반감 등으로 M&A 보다는 신규설립 방식이 절대 다수 차지하고 있다. 2008년 M&A방식의 투자는 847건, 20.8억 달러로 전체 직접투자 건수의 3.1%, 금액의 2.3%에 불과하여 M&A보다는 신규설립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M&A투자 주요국은 홍콩 및 조세회피 지역인 케이먼군도, 버지니아군도 등으로 이들의 투자가 전체 M&A투자의 83.8% 차지하였다. 2008년 중국에서 이루어진 M&A의 84.6%가 1,0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이고, 1억 달러 이상의 M&A는 0.7%에 불과한데, 이는 외국자본의 대규모 M&A에 대한 중국 내의 반감 및 중국정부의 M&A에 대한 규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기업이 기간산업, 유명 상표, 전통기업 등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인수하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M&A시에 상무부(商務部)에 신고하도록 강행하고 있다.²³⁾

23)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했다더라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중국정부는 M&A 당사자들에게 거래 중단을 요구하거나 기타 유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에 관한 규정(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 제12조, 2006.8).

3. 대 중국 외국인 투자 전망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 중국 직접투자는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투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선진국들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속도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진출목적별로는 원가절감형이 아닌 내수시장 진출목적의 투자가 점차 늘어나며, 특히 서비스업으로의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외국인투자정책이 과거와 같이 무분별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지양하고 첨단기술 산업 등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근로자의 임금상승, 고용관련 비용 상승 등으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퇴색되어 가고 있어 제조업 부문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은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중국정부는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중국 내수시장의 비중이 점차 커질 전망으로 유통업 등 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중에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하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안(兩岸)관계의 개선으로 대만기업들의 투자 증가 전망된다. 대만은 친중노선을 표방한 마잉주(馬英九) 정권의 출범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2010년 6월 29일 중국과 대만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번 ECFA 체결은 '기본협정'의 체결로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분야별 확대 협상을 개시해 조속히 완결할 것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 이전에 양안 간 본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²⁴⁾ 또한, 중국정부는 대만과 인접한 푸젠(福建)성에 대만기업 전용 공단(海峽西岸經濟區)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²⁵⁾ 대만기업의 대 중투자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으로 대만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24) 권혁재,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SERI 경제 포커스」 제300호, 삼성경제연구소, 2010.7, pp.1-25.

25) ‘푸젠성의 해협서안경제구 건설 촉진과 관련한 약간의 의견(关于支持福建省加快建设海峽西岸经济区的若干意见)’, 중국 국무원, 2009.5.

된다.

기업들의 투자규모는 점차 확대될 전망인데, 과거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중소기업의 소규모 투자들이 중국 내 사업환경 악화, 중국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등으로 중소기업이 소규모자본으로 투자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현재 투자추이가 중국을 단순생산 기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건당 투자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

제2절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현황

1.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 추이

1988년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가 시작된 이래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급증세를 보이면서 증가했다. 1988년에는 1건, 1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6월말까지 14,758건, 152억4천2백만 달러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한국의 대중투자는 실행 투자금액 기준으로 1992년에 1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6년 약 9.3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대 중국 투자가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한국 국내의 빠른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던 한국의 의류, 신발, 전자부품 등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대거 이전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의 대 중국 투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즉 투자금액 면에서 한때 9억 달러 수준에 육박했던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인하여 1999년 3.7억 달러까지 격감하였다. 2000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는 1996년까지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7년 이후 감소세를 돌아서 1999년까지 격감하다가 2000년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들어 중국의 투자환경변화로 투자 건수가 급증하면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의 계기로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다. 2001년에 투자건수가 1,000건을 돌파하였고, 2002년 이후 총투자 건수 및 금액 면에서도 미국을 제치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여 중소제조업 위주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한국 전체 투자의 평균 5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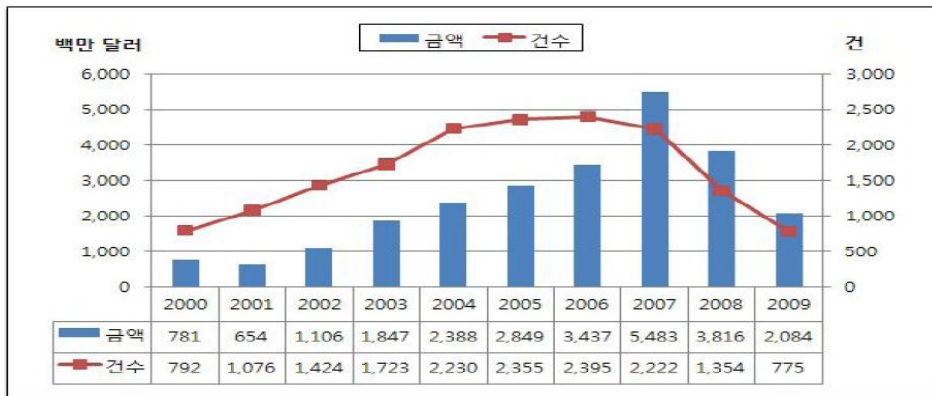
2005년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건수(신규법인 기준) 2,242건으로 전년 동기

26) 탁세령(2006), 前揭論文, p.15.

대비 3.8% 증가했고, 금액은 26억3천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다. 이는 2004년의 투자가 2003년에 비해 건수 28.1%, 금액이 39.2% 증가한 것에 비하면 2005년의 전년 동기 대비 투자는 각각 24.3%, 26.5% 감소한 것이다²⁷⁾.

한편 세계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대 중국 투자는 크게 감소하였는데, 투자금액은 20억 8,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5.4% 감소하였으며, 건수는 775건으로 전년 대비 42.8% 감소하였다. 반면 2010년 대 중국 투자금액과 건수는 제조업, 금융업 및 보험업의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투자금액과 건수가 15억 2,200만 달러, 433건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각각 67.2%, 25.1% 증가하였다.

<그림 3-2> 한국기업의 대 중국 직접투자 추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www.keri.koreaexim.go.kr), 2010.

27) 조현선,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 「기획조사」 06-009, KOTRA 동북아 팀, 2006.2, pp.6-7.

2.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 현황

가. 지역별 투자현황

현재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는 산둥성, 동북3성, 북경시 천진시, 장강삼각주 및 동남연해지역에서 95%이상으로 타 지역의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6월말 까지 산둥성으로의 총투자 건수는 5,349건으로 전체 14,714건 중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산둥성은 기후가 좋고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고 산둥성 정부가 한국과의 교류 상 특혜를 부여한 것도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진출비중을 보인 동북3성은 전체 14,714건 중 3,282건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3성은 타 지역에 비해 현지 조선족을 고용함으로써 인해 해외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의 하나인 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조선족들의 중국 내 지위와 경제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도 나타나는 지역이다. 동북3성 중에서는 요녕성 투자가 가장 많다. 다음으로 장강삼각주 및 동남연해지역 그리고 북경시, 천진시 각 20% 그리고 16%를 차지하고 있다. 장강삼각주지역은 주로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에 있는 15개 도시로서 이 지역은 소비수준이 비교적 높아 경제특구인 포동 개발구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에 따라 설치된 곤산, 장가항, 홍교 등 국가 급 개발구와 투자환경이 양호한 성급 개발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정책적 우대조치로 어느 지역 못지않게 양호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다. 현재 상해시는 임대료와 임금이 높아져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는 상해시와 가장 가까운 강소성을 선택하고 있다. 동남연해지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고 언어와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임금과 토지사용료 부담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다. 천진시는 중국 개혁과 개방초기부터 양호한 항구조건으로 노동집약산업 위주의 한국 기업들이 가공무역형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북경시는 2008년 북경 올림픽이 가까워지면서 2002년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

〈표 3-3〉 한국기업의 지역별 대 중국 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건)

지역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강소성	금액	626	1,112	1,575	528	483
	건수	198	240	213	128	72
산둥성	금액	687	850	809	807	422
	건수	866	790	726	333	173
요녕성	금액	186	184	489	529	247
	건수	270	259	279	146	88
천진시	금액	223	300	301	205	185
	건수	215	177	155	117	67
북경시	금액	451	270	1,039	645	160
	건수	205	233	195	139	65
상해시	금액	165	219	238	240	135
	건수	160	180	211	178	104
호남성	금액	62	82	3	6	107
	건수	2	6	6	1	1
광둥성	금액	86	128	201	232	102
	건수	64	77	76	64	67
질강성	금액	124	82	145	117	88
	건수	75	93	68	58	26
강서성	금액	0.3	8	82	128	38
	건수	2	8	6	3	6
전체	금액	2,806	3,424	5,247	3,748	2,082
	건수	2,252	2,300	2,121	1,296	73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www.keri.koreaexim.go.kr), 2010.

2010년 상반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길림성, 강소성, 산둥성, 요녕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길림성은 투자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6,340% 증가한 3억 2,200만 달러로 최대 투자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하나은행의 중국 길림은행에

대한 지분투자(3억 1,600만 달러, 지분율 18%)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건수 기준으로는 산동성에 대한 투자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시, 강소성, 북경시가 각각 76건, 47건, 41건으로 나타났다.

나. 업종별 투자현황

중국과 한국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대 중국 주요 수출상품은 화학제품을 비롯하여 전기전자제품, 철강, 기계류, 섬유류, 비금속 광물 등이고 대 중국 주요수입상품은 천연 섬유류, 농수산물, 광물성 생산물, 전자부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비교우위에 따른 수평분업의 형태도 강하게 보이고 있어 섬유류, 화학제품, 전자제품, 금속제품 등은 수출과 수입에서 동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교역품목이 가공무역용 원부자재이나 최근 중국정부가 가공무역 원부자재수입 보증금 제도 실시 및 각종 수입규제로, 중국사과 대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구매선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에도 한국기업의 업종별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이 여전히 주축이나, 2010년 들어 업종별 대중국 투자의 가장 큰 변화 특징은 금융 및 보험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상반기에 제조업은 투자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31.3% 증가하여 1위를 유지(누적투자금액 기준으로도 1위)하였다. 금융 및 보험업은 하나은행의 길림은행 지분투자로 투자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1,755% 급증하여 2위를 기록하였다. 2009년 제조업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던 도매 및 소매업은 2010년 상반기 에도 투자금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한국기업의 업종별 대 중국 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조업	2,251	80.2	2,797	81.7	3,755	71.6	2,312	61.7	1,652	79.4
도매 및 소매업	189	6.7	227	6.6	198	3.8	531	14.2	150	7.2
건설업	68	2.4	89	2.6	133	2.5	134	3.6	59	2.8
금융 및 보험업	94	3.3	16	0.5	656	12.5	258	6.9	50	2.4
기 타	204	7.4	295	8.6	505	9.6	513	13.6	171	8.2
전 체	2,806	100	3,424	100	5,247	100	3,748	100	2,082	1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www.keri.koreaexim.go.kr), 2010.

제조업 부문별로는 IT 분야의 비중이 37.4%로 높으나 점차 하락 추세이다. 그간 제조업 중 IT 분야가 우리나라 대 중국투자의 주축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 그 비중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중 IT 분야의 비중이 2006년 상반기 48.5%에서 2009년 상반기에 19.0%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는 자동차, 화학 등 다른 분야의 투자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다. 기업규모별 투자현황

2010년 상반기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투자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대기업은 96.8%로 대폭 증가하였다. 전년동기 대비 투자금액 증가율은 대기업이 96.8%, 중소기업은 21.9%로 나타났다. 투자금액 비중은 대기업 69.9%, 중소기업 26.6%로 특히 대기업의 투자비중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동기 대비 건 수 증가율은 대기업 23.8%, 중소기업 28.3%를 기록하였다.

〈표 3-5〉 한국기업의 기업규모별 대 중국 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대기업	금액	1,912	3,406	2,210	1,276	1,218
	건수	84	91	70	38	35
중소기업	금액	1,206	1,539	1,356	707	483
	건수	929	846	545	323	214
개인기업, 비영리단체	금액	305	302	182	98	66
	건수	1,287	1,184	681	378	27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www.keri.koreaexim.go.kr), 2010.

라. 투자목적별 투자현황

2010년 한국기업의 대중국에 투자목적을 분석한 결과 현지시장 진출과 저임 활용의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상반기 현지시장 진출이 목적인 투자는 27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2.6% 증가하였고, 저임 활용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7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5.1% 증가하였다. 투자금액 기준으로 2010년 상반기에도 1위를 차지한 현지시장 진출목적의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79.9% 상승하였다. 반면, 저임 활용목적의 투자는 전년 동기 3위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 상반기에 투자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107.6% 증가하며 2위를 기록하였다. 전년 동기에 2위를 기록하였던 수출 촉진목적의 투자는 4.2%의 미미한 증가율을 보이며 3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적극적 외자유치를 통한 기술발전을 추진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3-6〉 한국기업의 투자목적별 대 중국 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현지시장 진출	금액	572	886	2,205	1,880	1,126
	건수	94	129	874	785	477
저임활용	금액	675	657	1,009	814	381
	건수	798	767	571	227	118
수출촉진	금액	768	838	1,126	633	405
	건수	580	597	443	222	114
제3국 진출	금액	124	44	156	171	27
	건수	61	69	75	23	11
자원개발	금액	82	43	140	67	24
	건수	24	17	18	12	8
선진기술 도입	금액	1	3	18	42	5
	건수	3	4	22	21	8
보호무역 타개	금액	90	98	79	92	50
	건수	41	39	17	6	3
원자재 확보	금액	23	38	28	1	1
	건수	88	114	15	0	0
기 타	금액	471	816	487	49	62
	건수	563	564	86	0	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www.keri.koreaexim.go.kr), 2010.

3.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 전망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 전망은 현지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금융 및 보험업 등 서비스 부문 투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불황타개를 위해 구매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내수 확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기부양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현지 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컴퓨터, 가전, 자동차 등 내수 업종과 석유화학, 철강 제품 등 인프라 관련 업종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비제조업 분야인 금융업, 보험업 등 서비스 부문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로는 동부 연해지역이 주류를 이루고, 중서부 지역은 소규모 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는 동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소비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당분간 소규모 투자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중국정부가 동 중서부지역에 대해 법인세 감면, 토지사용세 및 부동산세 면제 등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투자 매력도가 여전히 높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별로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위주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며,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투자는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등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어 이들 부문에서 기술 우위를 보유한 기업 위주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정부가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분야의 투자를 억제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우대정책 폐지, 임금 상승, 위안화가치 절상 및 노동정책 변화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진출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철수하거나, 저임금을 활용할 수 있는 중서부 지역 또는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절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의 문제점

1. 중국 투자환경에 기인한 문제점

가. 잦은 정책변화와 복잡한 행정체계

중국은 최근 들어 투자과잉, 환경오염, 국내기업의 역차별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초기의 양적성장을 목표로 하는 투자유치 전략에서 '질적성장 투자유치' 전략으로 정책기조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첨단기술 분야로의 투자유도를 강화하고, 산업별 유치 정책을 강화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유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우대세율을 폐지하고, 외채제도를 강화 하는 등 중국의 투자 정책에 대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와 대응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중국의 행정체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매우 많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어느 부서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워 투자지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투자 전 면밀히 여러 사항을 준비할 수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국 현지 조선족 통역을 통해 투자계획을 실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 시스템의 폐쇄성은 중국투자 환경에서의 불확실성을 가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²⁸⁾.

나. 미흡한 투자자 보호 제도

중국의 국가정책에 따르면 "법적으로 의상 투자기업을 관리하고 중·외 투자자와 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투자자의

28) 최국진, "한국기업의 대 중국진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39.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을 모두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 이 양자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 활동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 가운데 비교적 빈번한 것은 내국민 대우 문제이다. 기차나 비행기를 타도 이들은 중국인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중국인보다 몇 배 내지 10 여배의 비용이 든다.

다. 중국정부의 과도한 경영간섭

2003년 이후 매년 평균 9%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한 중국정부가 최근 경기과열방지를 위한 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거시정책의 변화에 따른 법인세 우대세율의 하향 조정 및 조세징수의 강화, 반독점법의 제정, 외국기업의 노동조합 설치 의무화 및 노사관리의 강화, 부동산 투자의 제한 등 우대정책 축소 등으로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경쟁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29)

중국의 지방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한 경영간섭과 지방정부 정책에 대하여 간섭하고 감독하는 행위가 존재한다. 이러한 간섭은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고용, 해고 및 임금수준에 대한 간섭, 노무관리에 대한 간섭법규, 기업경영성과에 대한 간섭법규 등이다.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간섭은 고용 및 해고, 임금수준, 기업경영성과, 노무관리, 그리고 다양한 요금이나 수수료 징수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용에 있어서 행정구역내의 인력을 먼저 고용토록 하거나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해고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압력을 배제할 수 없다. 임금인상압력은 특히 저임금 노동집약형 경공업의 경우이고, 내수시장형 기술집

29) 황병우(2007), 前揭論文, p.52.

약형 업종의 경우엔(특히 미국기업들) 임금인상 자제압력을 가할 때가 많다. 노무관리에 대한 간섭 중에 매우 심각한 것은 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구성을 요구하고 노조위원장을 파견 또는 선임하거나 노사분규를 일으켜 임금문제를 거론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부당한 사례 외에도 찬조금이나 수수료 징수하는 준조세 형태도 한국내의 관습과 비슷하지만 부담은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³⁰⁾

라. 외국기업간의 과다경쟁

유럽, 미국, 일본 기업에 비해 비교적 중국시장에 늦게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외국의 투자자들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환경은 한국 기업의 입지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기업은 대 중국 투자에서 여타 기업에 비해 발전은 빠르지만 진출이 늦었다. 한국 투자기업은 중국내 가장 위협적인 경쟁상대가 현지 외국기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35.9%로서 중국기업이나 현지 한국기업 보다 높게 나타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유럽·미국·일본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 중국 업무를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는 주로 상품무역으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기술무역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직접투자를 단행하였다. 즉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무역-기술합작-투자’의 방식을 통하여 중국시장에 단계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그러나 1992년 이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했을 때 유럽·미국·일본 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투자단계에 들어가고 있었다.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일찍이 중국에 진출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만난 경쟁상대는 중국 국내기업 뿐이었다. 이들 외자기업 제품은 비교적 강

30) 김상덕, “중국의 투자유치정책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활성화 방안”,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143.

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고 업무 규모를 점차 확대시키면서 생산원가를 낮추는 등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즉 승용차·엘리베이터·컬러TV·브라운관·세탁기·비디오·에어컨 등이 업종에서 유럽·미국·일본 기업들이 자체의 시장을 육성하고 일정한 몫을 점유한 시점에서 한국 기업들은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 한국기업들은 이들 선진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무역-기술합작-투자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부득이 전 단계들을 뛰어넘어 직접 투자활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을 잘 파악할 수 없었고 합작 파트너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따라서 투자 프로젝트 선택, 투자지역의 선택, 합작파트너 선정에서 애로가 중첩되었으며 실패율도 높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까지도 대 중국 투자기업의 투자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 낮은 노동생산성과 높은 투자원가

중국특유의 주민등록제도로 인하여 농촌과 도시간의 근로자 이동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되며, 또한 일반 노동자·농민과 고등교육을 받은 사무직 근로자들이 각각 관리되기 때문에 기업을 옮기는 데도 상당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필요에 의해 탄력적으로 근로자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 밖에도 주택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소속기관이 부담하는 제도도 노동력의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중국 측 중간관리층의 생산·노무관리의 효율성과 관리능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중국인들은 새로 습득한 기술을 다른 동료에게 잘 가르쳐주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의 교육훈련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과급효과가 적고, 또한 교육수준이 보편적으로 낮고 생산과정에서 재료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어 대중국 투자기업들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투

자를 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편 중국의 물가수준은 1990년대 중반 급속히 상승했으며, 특히 1992년 이후부터 부동산가격, 인건비, 소비재가격, 원자재가격이 급등하여 투자원가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으며, 예전에 실시되던 외자에 대한 일부 우대정책이 없어져 신규투자에 대한 원가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다.

외국 투자자의 자체용 승용차와 생활·사무용품에 대한 관세면제, 투자액 내에서 기계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정책 취소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1990년대 말부터 현격히 낮아졌으나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나 정책조정은 모든 외국 투자자들이 동일하게 착안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중국에 일찍 진출해 있는 외국 투자자들은 과세우대 정책을 이미 향유했고 그 우대정책이 취소되기 전에 이미 필요한 설비들을 거의 수입하였다. 즉 기존 국가의 투자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환경 하에서 투자하여 이미 튼튼한 기반을 조성했기 때문에 물가상승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다. 이에 비해 늦게 진출한 한국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원가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었다.

마. 중국특유의 상관습과 문화적 차이

중국식 상관행은 거래자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행이다. 중국은 경제개혁·개방의 기초와 더불어 WTO에 가입한 국가이지만 외국기업과의 거래에서 계약취소 및 불이행, 미수금 문제 등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는 국가이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중국업자들이 담합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원료조달이나 기타 상행위에서 방해를 조장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통적인 상관행이 수요·공급자, 생산자와 유통업자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 외국기업들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본래 역사적으로는 중국과 같은 문화권에 속하므로 이러한 측면의 문화적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겪게 되나, 체제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은

문화적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진출 시 이를 최대한 면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중국의 시장경제 요소 도입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입각한 한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단계적 투자전략 역시 요망된다.

사. 한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초창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들 기업을 통해 한국기업을 알게 되었다.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은 기술 수준과 관리수준 및 생산성이 높아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며 현지 정부로부터 선진기업으로 평가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한국 투자기업들은 기업관리 수준이 낮았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편이었으며, 복리후생이 낮아 노사분규를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전체 한국 투자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예컨대 일부 한국 기업은 생산관리에서 중국직원들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만을 사기도 하였다. 또한 경영부실로 결손이 생겨 부채를 지게 되자 중국인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뒤 상환하지 않고 한국으로 도피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극소수의 경우이나 한국 기업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현대·삼성·LG 등 대기업은 대 중국 투자규모가 클 뿐 아니라 기술이 뛰어나고 기업 관리도 과학적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중소기업 보다 중국진출이 늦었기 때문에 선발 중소기업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썼는데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최근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됨으로써 국가 간 문제가 되어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8년 2월 한중 양국의 최대 명절인 설을 전후하여 임금, 세금, 채무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한국 기업들이 무단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000년 이후 칭다오 부근에서 무단 철수한 기업이 206개사에 이르렀다.³¹⁾

한국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태라 할 수 있다.

2. 한국 투자기업에 기인한 문제점

가.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투자업종 집중

한국의 대중국투자는 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노동집약적 제조업부문의 많은 기업들이 한국국내의 생산비용 상승 등 투자 환경 악화로 인하여 생산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들은 주로 중소기업으로서 대부분 원자재와 핵심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공한 후 한국이나 제3국에 수출하는 경영 형태를 갖는다.

최근 한국의 대중국투자는 대기업의 진출이 증가하였고, 비제조업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투자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집약적 제조업부문의 집중투자 현상은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입장에서는 산업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한국입장에서는 투자의 다양화 추진에 매우 불리한 요인이 되고 있다.

나. 투자지역의 편중

현재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는 산둥성, 동북3성, 북경시 천진시, 장강삼각주 및 동남연해지역에서 95%이상으로 타 지역의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주로 한국이 이 지역에 대하여 지리상의 인접성, 문화의 유사성을 갖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경제협작의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

31) 대한상공회의소, "중국 사업철수, 正道를 걷는 기업들도 많다", 「중국투자뉴스」 0516-101, 2008.5.10.

다. 또한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정보비용과 투자비용 및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의 사회·경제적제도나 특성과 융화되어 최근에는 외국인투자기업간의 과당경쟁으로 오히려 직접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내수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타 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東北3성과 환발해만지역에 대한 편중성은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입장에서는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한국입장에서는 투자지역의 확대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정부는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서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내륙지역의 각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지방세 감면, 내수판매 비율 완화 등 특별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연해지역에 이미 확보한 생산및 판매거점을 기반으로 삼고 중서부내륙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내수시장 개척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단독투자 선호와 합작파트너 선정 문제

대 중국투자 한국기업은 투자방식에 있어서 독자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비용절감형과 생산거점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들 기업들은 투자기업의 경영권 확보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대부분 단독투자의 형태(64.7%)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현지투자(22.6%)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단독투자 선호 현상은 현지 파트너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뿐만 아니라 현지 제도의 잦은 변경과 불확실성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리와 외국기술 습득의 어려움, 국내 유희노동력 활용의 한계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고, 한국입장에서는 내수시장개척의 어려움과 기업의 현지화

실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합작이나 합자 형태의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합작 파트너의 선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농촌이나 소도시의 자질이 부족한 향지기업과 합작을 하거나 현지의 특정 개인과 합작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선택한 향진기업이나 개인들은 경제력이 없을 뿐 아니라 문화수준도 낮고 기업 경영 수준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런 기업과 합작해서 성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운 일인 것이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합작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의 가치를 증대시켜 줄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를 선정해야 하며, 다음으로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목표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합작기업을 경영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이후에도 여전히 경영성과가 미흡할 경우 자산매각, 이사회 임원교체 등의 방법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 철저한 사전 준비 부족

중국에 투자하려는 한국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중국에 대한 정보 부족이다. 사전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분석 및 투자전략수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결국 대중국투자의 직접적인 실패요인으로 연결된다. 치밀한 사전정보 수집 및 준비가 없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면서 원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타 선진국에 비해 중국진출이 늦은 한국기업들은 다른 나라 투자자나 일찍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투자자들이 성공한 사례를 목격하고 나중에 투자하기 시작한 한국 기업들은 대 중국 투자의 유리한 면과 성공할 수 있는 기회만 생각하고 불리한 조건이나 위협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경우가 많았다. 어떤 기업들은 사전 프로젝트의 타당성 연구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기업도 있었으며 남에게 위탁하여 대행하게 하는 일도 있었다.

2008년 KOREA 칭다오무역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기업의 중국 내 기업경영 최대애로사항은 '임금상승'과 노무관리로 나타났으며, 중국경영 최대 애로사항(복수응답)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 기업의 62.8%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 신노동법 시행에 따른 사회보험 및 경제보상금 부담,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인력난 등 노무관리를 꼽았다.³²⁾ 그 다음으로 증치세 환급률 인하, 기업소득세 조정 등 기존 세제혜택 취소에 따른 자금부담(23.4%), 급변하는 정책과 불확실성(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한국기업의 중국 경영환경 최대 리스크 요인

원부자재, 물가상승	급변하는 정책, 불확실성	위엔화 환율하락	세제혜택 취소	임금상승, 노무관리
17.1%	18.1%	14.9%	23.4%	62.8%

고봉숙, "중국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철수 현황과 문제점 분석", KOTRA 칭다오무역관, 2008.1, p.2.

또한 사업 철수 시 최대 애로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기존 혜택 세제에 대한 소급추정(18.6%) 등을 꼽았으며, 이외에 사회보험, 임금 등 소급추정(5.3%), 장기간 소요(5.3%), 관계당국의 비협조적 태도(4.3%), 면세 원부자재, 설비에 대한 과세추징(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2) 고봉숙, "중국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철수 현황과 문제점 분석", KOTRA 칭다오무역관, 2008.1, p.1.

〈표 3-8〉 한국기업의 중국사업 철수 시 애로사항

책임감, 윤리의식부재	신변위협	제도미흡, 장시간, 절차복잡	세금, 보험료 등 소급추징
6.4%	9.6%	13.6%	18.1%

고봉숙(2008), 上揭論文, p.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철수 시 최대 애로사항과 한국기업의 무단 철수 원인에 대한 공통점은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 소급추징을 가장 큰 요인으로 들어 중국 진출 시 혜택으로 작용했던 기업소득세 감면이나 투자설비 면세정책이 철수 시에는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중국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퇴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정상적인 철수를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윈스톱 청산시스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한국기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역시 요구된다 할 것이다.

마. 상품의 고급화 이미지 실현 미흡

중국은 내국기업과 외국기업, 그리고 다국적기업이 서로 공존하는 가운데 경쟁하는 시장이다. 중국에 투자한 많은 한국기업은 중국내 내수시장 공략을 희망하고 있지만 중국내수시장에서 고급제품 이미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국민소득수준 향상, 대외개방폭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입 증가 등에 따라 중국소비자들의 수요와 기대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중국내수시장에서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제품을 고급화시키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대중국투자한국기업들은 대부분 기술수준이 낮은 경공업, 방직업 등 노동집약적 분야의 진출이 많고,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밥솥 등 소비재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업종에 투자한 기업들은 때때로 중국시장 내에서 중국기업과의 치열한 경쟁관계

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품질이 뛰어난 고급제품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³³⁾

바. 기업의 현지화 수준 미흡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기업의 현지화를 매우 중시하는데 반해 한국기업의 현지화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외국기업의 경우 기업이 요구하는 원·부자재를 대부분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관리자와 업무담당자 등 기업의 관리인력 뿐만 아니라 최고관리자까지도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경우는 원·부자재를 대부분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수입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최고관리자부터 중간간부, 심지어는 평사원까지 한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많은 중국인 근로자들은 한국기업에서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근무하다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경영현지화는 현지 우수인력의 조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요소이지만, 현지 한국기업들은 현지 경영관리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현지 경영성파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 인사·노무관리 능력 취약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부분은 투자초기에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 노무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2-3년 정도의 일정한 기간을 거치면서 점차 안정 단계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노무관리는

33) 노키아는 중국시장의 선발전입자로서 저가격대의 PCS를 판매하고 있으나 후발전입자인 삼성전자의 애니콜 PCS는 고급·고가이미지 실현을 통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외에도 태평양 립스틱, 하이파이브 울시, 미용실 이가자, 오리온 초코파이, LG에어컨 등은 철저한 고품질, 고가전략을 통하여 고급브랜드를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킨 성공 사례들이다.

여전히 현지 법인 경영의 성패를 좌우 하는 가장 중요한 관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많은 업체가 단순노동력의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숙련노동자나 전문 기술 인력의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노동력 확보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외지 노동력 해용 비율을 높여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건비 상승률은 연 20% 정도로 아직까지 경영에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3-4년 후부터는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월 평균 급여는 지역별 업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약 600-800 위엔(단순노동 기준) 정도이며, 상해지역이 다른 지역 보다 3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법인 가운데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며, 이들 기업의 경영자는 노무관리경험이 많지 않아 노무관리가 안정화되기 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정부가 노조설립을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투자업체의 경우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업체는 많지 않다. 노조에 대한 현지 법인의 소극적 입장 때문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 노조가 회사 경영에 오히려 도움이 된 경우도 있는 만큼 투자기업의 노조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투자기업들은 점차 개방화 국제화 시대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무관리 및 노사문제 해결의 원활한 운영과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제4장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 활성화 전략

제1절 전략수립을 위한 SWOT 분석

1. 기회·위협요인 분석

본 논문의 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1979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각종 우대조치 등을 통한 양적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1차 5개년 계획’상의 각종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도록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11차 5개년 계획에서는 중국경제가 그 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이는 수출주도형 발전 및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크게 의존한 결과였으며,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동·중·서부지역간, 도시·농촌간, 사회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환경·에너지부문 등에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기존 발전전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그 동안 추진해 온 경제발전전략의 전환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방향에서는 ‘내수주도형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및 자주적 기술역량 강화’전략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즉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주도형 발전전략의 추구, 경제성장의 관건이 되는 산업기술이 중국내 외자기업에만 머물고 중국내 토종기업으로의 이전과 기술향상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의 확산, 서부대개발·동북3성 진흥 및 3농(농업·농민·농촌)정책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및 사회복지정책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³⁴⁾

중국정부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이미 중국에 투자하고 있거나 앞으로 중국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한국기업들에게는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고 할 때, 기업은 물론 정부 및 관련단체들은 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책의 변화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전략을 마련해 가야 할

34) 황재한,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와 대응전략”, 「동북아경제연구」 18집 3호, 한국 동북아경제학회, 2006, pp.1-26.

것으로 보인다.

가. 기회(opportunity)요인

최근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변화가 중국에 이미 투자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을 주요 정책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반요인이라 할 수 있는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정책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신농촌 건설'정책의 추진에 따른 영향으로 농촌 기간시설 건설과 농업시설, 농업기계류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및 투자여지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제한적이거나 농촌지역 내수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협조적 지역발전 촉진정책의 추진으로 동부·중부·서부·동북지역 등 다양한 지역으로의 진출전략 추진이 가능하며, 지역별로 보면 연해 및 동부지역은 우선적 발전전략 추진, 대외지향적 발전 및 첨단·주도산업 위주의 발전, 외자유치전략 추진 등으로 가공수출산업분야와 내수시장을 겨냥한 대기업 진출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부내륙지역은 중부지구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노동집약적 발전단계, 물류조건 불리 등을 감안한 투자 및 교역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동북지역은 노후공업기지 진흥, 국유중공업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본격화로 이 분야에 대한 수출 및 진출 가능성, 농업관련 기계 및 원자재류, 내수분야 등에 대한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중국·북한간 교류 및 개방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기반조성 차원의 투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부내륙지역은 서부대개발 추진에 따른 기간시설·에너지 개발 및 관

련 설비투자 등의 수요가 증대될 전망이다.

넷째 에너지·환경·교육·도시 등 인프라 강화정책의 추진에 따른 관련 분야 사업에의 진출 확대가 기대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관련 정책의 추진은 발전시설과 파이프라인 및 에너지 저장시설 등의 건설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강화정책으로 한국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6 지적재산권 보호 행동계획’ 등 지적재산권 행동 요강의 제정 및 실시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이 과거보다 보호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섯째 산업부문의 기회요인을 들 수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임과 동시에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함으로써 새로운 소재 및 부품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한국기업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전자정보,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이른바 중화학공업부문의 부상과 고급품에 대한 수요 급증, 서비스산업 육성 등은 한국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영상의 노하우 등이 중국기업들에 비해 아직은 크게 앞서 있다고 볼 때 내수시장에서의 시장확대가 기대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개혁 심화 및 개방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개방과 경쟁을 확대해 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수시장과 경쟁분야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위협(threat)요인

위협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먼저 중국정부가 ‘11차 5개년 계획’상의 ‘독자적 혁신능력 강화’에서 선도산업 및 독자 브랜드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정보산업·생물(BT)산업 등을 지정하고 이들 산업들을 집중 육성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예상된다.

둘째 자동차 독자 개발능력 제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형 승용차 개발,

선박공업 강화 등을 통한 중요 기술장비 연구개발 및 설계, 핵심부품 개발 강화 등을 도모한다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한국 대기업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심각한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낙후된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 시장·기술교환(市場換技術)정책의 목적 달성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기술이전 내지는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독자기술 개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를 표방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기업들과의 기술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전망이다.

넷째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기본방향도 ‘외자이용의 질 제고와 외자 이용방식의 다양화’ 등으로 바뀌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세계 등 그 동안의 우대정책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섯째 산업부문의 위협요인을 짚어 볼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급속히 향상되면서 수입대체와 수출산업화가 급진전되고 있어 저부가가치산업은 물론 고부가가치산업의 일부에서도 이미 한국기업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또 다국적기업들의 사업영역 확대로 한국기업들의 상대적 지위하락이 예상되며, 중국정부의 토종 대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제한적 조치 및 우대조치 철폐 등은 한국기업들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도·농간, 지역간 불균형 문제 등은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조화로운 사회 건설’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장, 산업재해, 고용안정 및 노사관계 등의 강화는 한국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2. 강·약점 분석

가. 강점(strength)

중국 국내기업들과 비교할 때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경영상의 강점으로는 첫째 기술력에 기초한 흑자기업이 많고 경영상태가 양호하며, 장래 투자전망도 낙관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과 그 동안 축적해 온 경험이나 경영상의 노하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며,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매출도 과거 가공무역형에서 중국 내수 시장 중심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고, 원부자재조달도 중국 비중이 높아지는 등 이른바 ‘현지화’되고 있어 중국 국내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함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기업들은 현지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적이며, 현지 연구개발 조직 보유기업의 비중도 높아 중국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노사관계 및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인력구성면에서 중간간부급에 대한 중국인 비중이 비교적 높고, 노동조합이 구성된 기업과 노사분규를 경험한 기업이 아직은 많지 않아 노사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향후 유망산업에 대한 조사에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유망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중국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과도 크게 부합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나. 약점(weakness)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약점으로는 첫째, 부품조달에 있어서의 저급한 품질문제, 인력확보 및 유지에 있어서의 노동자·기술자·관리자 모두 양적 질적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높은 임금상승률과 과도한 사회보험료, 업체간 과도한 임금경쟁 등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각종 우대정책의 축소에 따른 부담 증가와 제도·세제·우대정책상의 공정성, 즉 인허가상의 문제,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 부당한 클레임, 상표 도용, 기술이전 강요 등이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2절 대 중국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

1. 생산원가 절감형 투자전략

가. 시설투자 및 부품조달 전략

현지생산 대상품목의 제조원가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항목별로 원가절감의 가능성과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대중국 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중국에서의 사업운영에 따른 각종 리스크와 부대비용을 감안한다면, 40%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없다면 기업의 기본 목적인 이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인건비 비교는 생산효율성의 격차를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국은 한국보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에 한국 같은 한 명이 필요한 자리에 여러 명의 고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중국에 비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종업원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밀을 요하는 공정에는 여러 명에게 일을 분할시킬 필요성도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³⁵⁾

일반적으로 직접인건비의 비율이 높지 않은 고부가가치형 사업의 경우 단순히 원가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국 투자의 이점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인 주재인력에 투입되는 경비는 전체 관리비용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최대한 낮추느냐가 중국사업의 수익성 확보에 관건이 된다. 그리고 관리·기술인력의 현지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생산원가절감에는 부품과 원자재의 현지조달률의 확대가 관건이다. 투자검토 단계에서 현지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주요 현지조달 소요품목에 대해서는 품질, 단가, 가격, 수량, 물품인도, 결제 및 검사조건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기능부품이나 特殊部品の 조달은 현지 메이커의 기술수준을 충분하게

35) 김상덕(2006), 前揭論文, p.151.

확인한 후 이뤄져야 한다.

기술지원을 통해 현지기업에게 부품을 개발시킬 경우, 기술정보의 유출방지와 지적재산권 보호측면에서의 만전의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에서는 지리적 여건이나 정보유통 제약 등 문제로 한국에 비해 현지조달 관련 정보수집이 매우 어렵다. 최근에는 중국정부의 투자유치와 관련한 정보지를 비롯한 산업 정보지등도 발간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며, 정확한 정보는 전시회를 참가하거나 기업방문 등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수집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부품 현지조달처 발굴과 마찬가지로 외부협력공장의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투자검토 단계에서 외부가공처의 소재지와 조달 및 생산능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업체들은 품질과 납기 준수 의식이 한국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중국시장은 어떤 부문이든 업체들이 난립해 있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불량 원자재와 부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외부업체의 제조공정과는 상관없이 불량품이 제조되어 공급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설비를 한국에서 반입할 것인가, 현지에서 조달 할 것인가에 따라 상당한원가의 차이가 발생한다. 현지조달 시 원가절감면에서 유리하나 설비 성능측면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설비를 반입할 경우, 초기투자비를 낮출 수 있으나 최근 중고설비의 수입은 중국정부의 엄격한 규제조치로 매우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³⁶⁾

나. 가공무역 정책변화 대응 전략

가공무역 금지품목의 확대와 증치세 환급률 인하 및 취소 조치는 향후 한

3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Global Korea 중국 투자실무가이드』, 서울 : KOTRA 편집부, 2008.8, pp.1-489.

국 대중 투자기업들의 생산원가 관리측면에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가공무역 금지품목, 증치세 환급률 인하 및 취소 품목에 대해 중국과의 가공무역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 및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업체들에 대해서 교육을 더욱 강화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2006년 실시한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에서도 응답 업체 중 상당수 기업들이 최근 중국의 정책 변화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정부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한·중 통상장관 회담 등 정부 간 협의 시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정책 집행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제한물품 등의 정확한 리스트를 조속히 확보하여야 하는 한편 업체등급 분류 시 가급적 2등급 이상으로 분류되도록 현지진출 업체들에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불합리 하도록 책정된 기업분류나 품목분류등에 대해서는 수정요청과 아울러 일본·대만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관련 업종의 신규진입에 따른 추가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중국의 산업정책변화에 대한 적극적 계도활동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대중국 가공무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대해서는 일반무역 방식의 생산 가능여부를 검토, 전환하여 수출입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가공무역을 계속 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공도가 높은 비 금지 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가공무역 수입금지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비하여 현지법인의 원자재 조달 현지화 노력도 강화 하여야 한다.

중국에 직접 투자한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에 대비하여 수출비중 축소와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환급률이 높은 품목으로 변환을 도모하여야 한다. 실제로 중국기업 및 중국진출 외국 기업들은 증치세 환급률 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로 수출보다는 내수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단순 가공 수출형에서 벗어나 내수 시장형 고부가가치 상품

으로 전환 하여야 한다. 즉 중국의 수출 규제로 생산제품이 내수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기업 간 경쟁심화로 제품 및 생산 방식의 고도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치세 환급률 추가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증치세 환급률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는 중국정부가 통제범위 내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수지 및 외환 보유고의 추이에 따라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출관련 정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무역, 투기정책 전반의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세 번(HS CODE) 재분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환급률 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 추가의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공무역 관리제도의 도입이후 최근 중국세관은 밀수와 기타 부정확한 방법의 수출입 거래를 전담하기 위해 경찰국이 신설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한국기업이 가공무역 제품 중국내 불 판매, 수입물품 가격저가신고 등의 혐의로 중국세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사례와 현지기업 사장이 구속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 스스로도 가공무역용 수입원자재 및 가공제품의 중국내 판매금지, 수입원자재 사용 후 규정된 기한 내 보고 이행, 물품 수입 시 정확한 가격신고 등으로 세관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³⁷⁾

37) 안재진, “중국 무역정책의 주요 변경 내용과 대응방안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및 증치세 변경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7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6.12, pp.217-241.

2.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전략

가. 기업경영의 현지화전략

현지기업의 현지화는 단순히 생산분야의 협조나 융화만으로는 어렵고 지역사회와의 정보공유나 문화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사람·물자·정보·기술 등의 경영자원을 현지에 투자하는 이외에 현지사회가 진출기업에 대해 요구하는 고용창출과 수출진흥 등 경제적 공헌은 물론 기술이전, 인재육성, 현지사회와의 교류와 조화, 환경자원의 보존, 사회·문화적 공헌 등을 통해 현지사회와 공존공영을 실현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있다.

현지기업이 경영국제화의 단계에 따라 전략을 구사할 때, 진출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현지화 전략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지화경영은 사람·자본·물자·생산·마케팅·R&D 등의 요소로 구성되지만, 현지에서 성공적인 사업은 현지화 경영전략에 의해 달성된다. 즉 국제기업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경영자원을 범세계적 차원에서 최적 배분을 통해 가장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한 통합화전략과 현지적응을 통해 투자마찰을 회피하고 경영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현지화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³⁸⁾

기업이 해외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업에 대한 경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과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뚜렷한 차별적 경쟁우위를 갖고 있지 못한 한국의 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해외투자전략의 수행에 앞서 투자대상국 선정에 대한 이러한 사전조사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중복투자, 과잉투자 등으로 인한 투자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투자여부가 결정되면 연관된 조사는 물론 일본 등 경쟁국의 투자동향 및 성공사

38) 박의범·김은주, “한국기업의 대 중국진출 현지화전략에 관한 연구-선도 전자기업의 현지화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2, pp.3-4.

레 등에 대한 제반조사 및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철저한 경영환경의 분석을 통해 진출하고자 하는 현지국의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유연한 전략을 현지화 전략이라고 한다. 이는 현지국 시장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업경영방식으로서, 기업들은 현지국의 훌륭한 기업시민으로써 현지 환경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에 부합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인적자원의 현지화, 원·부자재 조달의 현지화, 마케팅의 현지화, 자금조달의 현지화, 연구개발의 현지화 등을 이룩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내기업들의 경우 현재 중국내 진출하고 있는 외국기업들과는 달리 인력 및 원부자재의 낮은 현지화로 필요한 기계설비와 원·부자재의 상당부분을 아직도 한국에서 수입하여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중국내 주요 권역별 시장에 있어서 시장점유율 하락과 경쟁력 약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지화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인적자원, 원·부자재 조달, 자금조달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현지화 전략의 출발은 인적자원의 현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투자기업의 관리직 대부분을 한국 파견근로자가 담당하고 있어 중국근로자에 대한 승진기회가 부족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임금 지급으로 현지인과의 과도한 임금격차 발생으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³⁹⁾

따라서 상당수의 중국 고급인력들은 한국기업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다가 구미기업이나 일본기업으로 이직하게 되며, 이직 이유는 단지 더 많은 월급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연구도 있는데 실제적인 경영권을 부여하지 않고 구미기업처럼 평등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글로벌스탠더드나 한국식 경영만으로는 실패하기 쉬운데 중앙정부, 省과의 유대관계를 위하

39) 임재열·권중욱,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방안”, 「경영과학연구」 제30권, 한국경영과학학회, 2004, p.175.

여도 "관시"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인적자원의 현지화와 더불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은 원·부자재의 구입에서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경우 품질이 떨어지고 적기에 조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거래처와의 확실한 관계유지와 지속적인 품질에 대한 감독이다. 거래처에 관련기술의 지원을 통해서 현지부품업체와 좋은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원·부자재의 현지화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금조달의 현지화도 추진해야 한다. 운영자금의 대출은 한국계은행의 지점보다는 현지의 금융기관을 활용함으로써 현지금융계와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현지화전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전략을 수행할 때 보수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소비수준이 높은 지역이 대도시임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한꺼번에 여러 지역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은 적합하지 않다. 중국의 상관습에 익숙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 형태의 판매전략을 채택할 경우 매출은 증가하되 판매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지화전략중의 하나는 중국기업을 M&A를 통하여 외국기업이 지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중국내 유통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기존의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M&A에 의한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인을 이용함으로써 현지시장개척에 도움을 주고 현지에서의 노사관리도 한층 쉬워질 것이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며, 기업이미지의 현지화에 주력하여 현지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세계적 브랜드임을 물론 현지국 브랜드라는 점 역시 투자시점부터 홍보하여 투자국 고객들에게 친밀감, 애착심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지역맞춤형 투자전략 수립

(1) 동부연해지역 투자전략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동부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동부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면, ① 북경, 천진, 하북성, 산둥성 등 환발해만 지역, ② 상해, 강소성, 절강성 등 장강삼각주 지역, ③ 광둥성, 복건성 등 주강삼각주 지역 등이다.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정책 이후 동부연해지역의 1인당 GDP는 크게 상승하여 광주, 북경, 상해 등의 소득수준은 중소득 이상의 타 국가수준에 이르렀으며, 구매력평가기준으로 보면 중·상소득이상의 국가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동부연해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과거의 가공산업에서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집약적산업과 기술집약적산업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고 있어 기존 투자기업이나 신규 투자기업 모두 새로운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기업차원의 구체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부연해지역은 사회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항구에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중국내수시장과 수출을 병행하는 투자전략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내 본사와 중국 현지법인과의 수출입 활동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여야 한다. 즉 본사와 중국현지법인간에 기업 내 분업을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부품의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처럼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를 보완적으로 실행하면 중국의 내수시장과 세계시장에서 모두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산업공동화에 따른 손실보다 비교열위분야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수지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동부연해지역에 인구 500만명 이상의 대도시 13곳의 총인구가 1억 명에 달하여 시장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의 소득수준이 높아 유효수요가 많다. 그리고 동부연해지역은 시장개방 정도가 높아 세계적인 다국적기

업들이 진출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브랜드 중심의 고부가가치제품을 가지고 내수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체브랜드가 없이 주문자상표에 의한 OEM방식의 수출을 했던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자체브랜드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IT 등 첨단산업분야의 해외수출기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한 첨단산업위주의 산업구조고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총 수출에서 첨단제품 및 기계설비 제품의 수출비중이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실적이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아직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중국현지에 해외수출기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는 정보화로 공업화를 발전시키고 공업화로 정보화를 촉진하겠다는 목표하에 첨단산업분야를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공급과잉상태에 있으나, 아직 기술집약적이고급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기업이 현지 기반을 구축하기는 그 만큼 용이하다고 하겠다.

(2) 동북3성 지역에 대한 투자전략

동북3성은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으로 요녕성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경제개혁·개방에서 소외되었고, 국유기업 비중이 높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창조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분야의 진출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동북3성 지역으로의 진출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부터 추진된 동북3성의 개발은 중화학공업 위주의 노후설비교체와 기술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한국기업들은 이런 중화학공업의 재건계획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중화학공업분야의 노후설비 교체사

업은 한국기업이 경제개발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한 국내기업 중 플랜트수출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설비의 교체와 운영에 있어서 기술적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근접성에 따르는 비용상의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기업보다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둘째, 동북3성은 기계 관련 기술자와 숙련기능공 등 기술인력이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에 공작기계분야 등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소득및 임금이 연해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노동력의 질적수준도 높은 편이어서 인적자원인프라가 좋은 편이다.

셋째, 교통요충지역으로의 이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동북지역은 육로로는 러시아, 몽고, 한반도에 이르는 주변 국가들과 연결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강점이다. 이는 동북지역이 일본, 시베리아 철도와 몽고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통하는 허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점이야 말로 해외를 통하는 육로를 지니지 못한 화남·화동지역에는 없는 동북지역만의 우위성이다. 그리고 2003년 7월에는 ‘중화의 별’이라는 최고시속 320km의 고속전철이 시험운행을 하였다. 또한 동북 지역의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圖們)을 잇는 대규모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가 2009년 8월 30일 국무원에의해 승인됨으로써 창춘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이 단일 경제벨트로 묶여 동북아 물류 거점화 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지역의 인구는 약 1090만명, 면적은 남한의 약 73%에 달하며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2800억위안(약 45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므로 한국 기업에게는 투자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넷째, 도시화가 되는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동북지역은 높은 소비수준을 보이고 있다. 동북지역은 소비시장규모나 1인당 소비수준을 종합해서 보면 제4의 경제권이며, 이점이 소비시장으로서의 동북지역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내수시장을 위한 직접투자에도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문화적인 유사성과 조선족 교포들이 타지역에 비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기업이 대중국 투자의 경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낮은 언어장벽 등의 접근성을 잘 활용할 수 있다.또 대중국 투자시 접근성면에서 가장 유리한 수많은 화교들이 타지역에 비해 동북3성으로의 진출이 적은 편으로 기업간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3)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전략

중국의 서부지역이라 하면 중경, 사천성, 귀주성 등 12개 지방을 가리킨다. 서부지역은 중국에서도 변방지역으로 소수민족이 집단 거주하는 빈곤지역이다. 한국은 서부대개발 공동협력을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한·중중국서부대개발협력위원회의 설치를 합의하였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을 통하여 동부와 서부지역의 지역간 격차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동부지역에 기진출한 한국기업은 그간에 축적한 현지사업 경험과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중국사업 전체로서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서부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부지역은 산업이 중국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생산제품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류·플라스틱·자동차부품·건축자재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 중에서 고부가가치 제품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서부지역에 대한 IT산업분야의 투자는 위험은 크지만 시장선점이라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서부지역 가운데 과학기술인력이 풍부한 서안, 성도로의 진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원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도 위험은 크지만 부족한 자원확보라는 장점이 있어 정책적차원에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부지역은 경제개혁·개방의 지연으로 보수적·폐쇄적·배타적성향

40) 강승호 외, “중국 동북3성 개발과 한국의 대응전략”, 「IDI행사자료집」 2004-3, 인천발전연구원, 2004, pp.45-49.

이 강하기 때문에 합작투자방식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동부연해지역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기술유출 등을 우려해 단독투자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서부대개발과정에서 소요되는 고급 원·부자재의 생산을 위한 투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역은 고급원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대체형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다. 내수기반형 명품화 전략

중국사회가 계층별 빈부격차의 확대 및 지역 간 소득격차의 확대 등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의 상당수가 복수 또는 다수 브랜드 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복수 또는 다수 브랜드 전략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굳어진 추세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시장에서의 각 소비계층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중국시장이 여러 개의 이질적인 시장으로 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자사 제품의 브랜드 전략에서 소득수준이 다른 각 계층을 겨냥한 복수 또는 다수 브랜드 전략을 구사할 것을 권한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 많은 유명 브랜드가 상당수 복수 또는 다수 브랜드 전략을 구사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

브랜드 사업의 시작은 고가브랜드로 진입하되 고가 브랜드 유지 불가시 저가 브랜드로 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중국 소비자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고가 브랜드가 나중에 가격을 인하하는 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그리 부정적이질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가 브랜드로 진입하고 난 후 중국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크게 되는 경향이 있다. 가격을 인상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다수 또는 복수 브랜드 전략으로 방향을 잡고자 할 때는 고가 브랜드부터 시장에 진입시키고 저가 브랜드는 나중에 진입시키는 것이 좋다. 하나의 브랜드를 고수할 때는, 처음 단계에서는 고가 정책에서 시작하되 부득이

한 경우, 차차 가격을 하락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국시장에서는 유명 브랜드 전략(명품전략)이 비교적 잘 먹혀 들어가는 시장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및 일본 화장품은 프랑스 화장품에 비해 해외시장에서는 지명도가 떨어지고 가격도 약간 낮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국 상해시장에서는 새로운 브랜드로 일본의 SK-II 와 미국의 H2O이 등장하여 프랑스 화장품 보다 높은 고가정책으로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두 브랜드 모두 매우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3. 투자업종 다각화 전략

2005년 이후로 중전의 제조업 위주의 투자제한 정책이 완화되고 서비스산업 분야가 거의 개방되어 유통업·정보통신·금융·보험·광고·물류·건설 등 서비스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정부가 앞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을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시장 진작에 두고 있고, 특히 문화적 유사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광·문화·교육·오락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제조업 위주의 투자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분야로의 투자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중국투자 제조업 비중은 2002년 88.9%에서 2008년 61.7%로 축소되었으며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확대 추이가 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향후 중국 사업에 있어서 제조업(23.3%)보다 서비스업(73.3%)을 유망산업으로 지적했다. 중국과 문화적인 유사성이 큰 만큼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의 서비스업은 중국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⁴¹⁾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의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중국내 비즈니스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중국현지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광

41) 정상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황과 시사점-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2006.10, pp.20-21.

고 등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의 개척과 한국계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활용은 아직 후보적인 단계에 있어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물류 서비스의 경우, 중국물류의 분질성과 비효율성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물류분야의 외국인 투자 증가로 현대적인 물류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내 물류가 생산자에 의한 직접물류에서 제3자 물류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외자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에 본격 진입하기 위해 본격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기업도 운송, 보관, 배송 등 물류분야의 중국진출을 서두름과 동시에 한국기업을 포함한 중국내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⁴²⁾

금융서비스의 경우 중국의 은행부문 개방에 맞추어 외국계 은행들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들 역시 중국진출에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점과 같은 영업점 진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소매금융시장 개방에 맞추어 중국 개인에 대한 소매금융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중국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PB(Private Banking)업무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⁴³⁾ 그리고 중국내의 취약한 지점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중소형 은행 등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42) 황의택,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변화에 따른 한국기업의 투자전략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56-58.

43) 양평섭·구은아(2007), 前掲論文, p.135.

4. 연구개발 투자전략

중국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변화에 부합하는 핵심제품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제품개발이 시급하다. 즉, 백화점식 제품구성이 아닌 중국의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소수 핵심제품군의 발굴과 집중을 통한 제품의 특화전략으로 승부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은 이미 주택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급격한 내수시장 확대가 개시 되었으며, 가전, IT,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에서 고급화 추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기업에 비해 현저히 빠른 신제품 출시 및 모델 교체기간 단축 등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쟁력 원천이 노동에서 자본과 기술로 이동해 가고 있는 만큼 단순히 저임금의 이득만을 노린 종전의 진출 전략은 유효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기업들의 기술수준과 품질향상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한국기업과의 기술력 격차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여 기술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중국현지 내수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확보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 결 론

1979년 개혁개방이후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통해서 외국인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으며,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폭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도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점차 확대되어 2009년에는 투자금액은 20억 8,400만달러, 투자건수는 775건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높은 저축과 경상수지 흑자로 투자재원이 풍부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기조는 과거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한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시장경제체제의 강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혜 축소나 감독 강화가 사업환경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과 진출전략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범위와 대상을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두고 이를 토대로 대중국 투자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외국인투자정책은 1979년 개혁개방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시작된 기반조성단계, 1993년 남순강화를 계기로 한 발전단계, 2001년 12월 WTO가입을 계기로 한 확대단계를 거쳐 2006년부터 적용된 11차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조정단계에 속해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11차 5개년 계획’ 시행 이후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의 주요내용은 첫째,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의 변경이다. 1997년 처음으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2002년, 2005년에 수정했고 2007년 11월 수정 발표된 목록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7년에는 41개 산업에 대한 351개의 장려업종과 87개의 제한업종, 40개의 금지업종으로 변화하여 장려, 제한 및 금지업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2010년 4월 13일 외국인 투자 선별 유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외자이용 개선에 관한 국무원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경제발전 수요 근거, 국가 산업조정과 진흥계획 요구에 부합하여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수정을 언급하고 있다. 그 주요 정책방향은 외자의 고급제조업, 첨단기술산업, 현대서비스업,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며, 반면 "2高 1資"(고에너지소모와 고오염 및 자원성)와 저수준, 과잉생산력 확장 유형 항목은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2010년 4월 29일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에서 중국 최초의 국가급 지역단위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인 「중국 중부지역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중부굴기'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본과 기술 등을 외자를 통해 선별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개방 초기의 맹목적인 외자 유치 및 확장정책에서 향후 첨단 제조업, 현대서비스업, 신에너지 및 친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등 선별적인 외자유치로 정책이 전환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중국시장에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외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하여 '반독점법 제정 및 M&A 규제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 28일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중국내 기업과 동일한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초안'을 통과시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중국내 기업과 동일한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셋째, 노무관리 정책의 강화이다. 2008년 1월 시행된 '신노동계약법'에는 노조설립의 의무화, 고용계약해지 및 중지 시의 보상, 파견근무 제한, 일정기간 경과 후 근로계약 체결강제 등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시 하는 많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외자기업들에게 노동조합 성격의 공회를 의무

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노무관리강화에 나서고 있다.

다섯째, 기술이전 및 R&D 투자요구 증가이다. 중국정부가 1990년대 이래 추진해온 '시장과 기술교환' 전략이 시장만 내주고 기술을 얻지 못했다고 평가됨에 따라 선진기술 이전, 연구개발센터 설립 등을 투자 허가 시 조건으로 요구하는 한편 기술 이전 시 더욱 큰 혜택을 주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여섯째, 환경관련 규제정책의 강화이다.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는 환경오염의 방지와 자연생태환경의 보호를 중시하여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이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제재규정 역시 매우 엄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생산비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등 향후 기업의 생산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본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크게 악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특혜제공에 대한 중앙정부의 견제 강화이다. 과거 중국의 지방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세율 추가 인하 등 우대정책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세수감소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일련의 특혜제공 행위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는 대세이며, 외국인기업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한 내국민 대우원칙을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시장경제체제의 강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변화된 정책 중에는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따른 투자가능성 증대, 신농촌건설정책 추진에 따른 농업관련 시설에의 투자기획 증대, 협조적 지역발전 촉진정책의 추진으로 다양한 지역으로의 진출가능성 증대, 에너지·환경·교육·도시 등 인프라 강화정책의 추진에 따른 관련분야 사업진출기회 확대, 지적재산권보호 확대, 산업발전 및 개방 확대로 내수시장과 경쟁분야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등 한국기업들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축소나 감독강화가 사업 환경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한국기업은 이에 적응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현황과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

역별로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는 산둥성, 동북3성, 북경시 천진시, 장강삼각주 및 동남연해지역에서 95%이상으로 타 지역의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010년 상반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길림성, 강소성, 산둥성, 요녕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의 업종별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이 여전히 주축이나, 2010년 들어 업종별 대중국 투자의 가장 큰 변화 특징은 금융 및 보험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규모별로는 2010년 상반기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투자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대기업은 96.8%로 대폭 증가하였다. 전년동기 대비 투자금액 증가율은 대기업이 96.8%, 중소기업은 21.9%로 나타났다. 투자목적별로는 현지시장 진출과 저임 활용의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투자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 투자환경에 기인한 문제점은 잦은 정책변화와 복잡한 행정체계, 미흡한 투자자 보호 제도, 중국정부의 과도한 경영간섭, 외국기업간의 과다경쟁, 낮은 노동생산성과 높은 투자원가, 중국특유의 상관습과 문화적 차이, 한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이며, 한국 투자기업에 기인한 문제점으로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투자업종 집중, 투자지역의 편중, 단독투자 선호와 합작파트너 선정 문제 철저한 사전 준비 부족, 상품의 고급화 이미지 실현 미흡, 기업의 현지화 수준 미흡, 인사·노무관리 능력 취약 등이다.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변화는 이미 중국에 투자하고 있거나 향후 중국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국기업들에게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정책의 변화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투자 활성화 전략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략수립을 위한 SWOT 분석을 토대로 생산원가 절감형 투자전략,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전략, 투자업종 다각화 전략, 연구개발 투

자전략으로 세분하여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생산원가 절감형 투자전략으로 시설투자 및 부품조달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생산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중국 현지생산 대상품목의 제조원가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 정부의 최근 가공무역 금지품목의 확대와 증치세 환급률 인하 및 취소 조치는 향후 한국 투자기업들의 생산원가 관리측면에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가공무역 금지품목, 증치세 환급률 인하 및 취소 품목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전략으로는 먼저 현지화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인적자원, 원·부자재 조달, 자금조달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거대 경제권으로서 지역별 기업경영환경이 상이한 국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부연해 지역, 동북3성 지역 및 서부지역에 대한 맞춤형 투자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내수기반형 명품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셋째, 투자업종의 다각화 전략으로 중국정부가 앞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을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시장 진작에 두고 있고, 특히 문화적 유사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광·문화·교육·오락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제조업 위주의 투자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분야로의 투자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수립이다. 중국은 이미 주택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급격한 내수시장 확대가 개시 되었으며, 가전, IT,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에서 고급화 추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기업에 비해 현저히 빠른 신제품 출시 및 모델 교체기간 단축 등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들의 기술수준과 품질향상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한국기업과의 기술력 격차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여 기술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중국현지 내수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확보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수교 18주년을 맞이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상대국을 경쟁국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중·장기적 협력 국가로 인식하여 상호 균형을 유지하고, 보완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 발전을 모색하며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교류 및 인재교류를 증진시켜 나간다면 양국은 한층 더 공고화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호 외, “중국 동북3성 개발과 한국의 대응전략”, 「IDI행사자료집」 2004-3, 인천발전연구원, 2004.
- 고봉숙, “중국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철수 현황과 문제점 분석”, KOTRA 청다오무역관, 2008.1.
- 권혁재,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SERI 경제 포커스」 제300호, 삼성경제연구소, 2010.7.
- 김경환, “중국의 투자환경변화와 대응방안”, 「한중사회과학연구」 7권, 한중사회과학학회, 2006.
- 김상덕, “중국의 투자유치정책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활성화 방안”,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주영,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최근 정책 방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동북아팀, 200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Global Korea 중국 투자실무가이드』, 서울 : KOTRA 편집부, 2008.8.
- 대한상공회의소, “중국 사업철수, 正道를 걷는 기업들도 많다”, 「중국투자뉴스」 0516-101, 2008.5.
- 박세근, “새로운 중국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2005.1.1 시행)”,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5.
- _____,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합병, 인수 규정”, 「해외경제·투자정보」, 한국수출입은행, 2007.
- _____, “최근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 「해외경제·투자정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9.8.
- 박의범·김은주, “한국기업의 대 중국진출 현지화전략에 관한 연구-선도 전자기업의 현지화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2.

- 안재진, “중국 무역정책의 주요 변경 내용과 대응방안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및 증치세 변경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7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6.12.
- 양평섭·구은아, “중국의 WTO가입 5주년 결산-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07-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7
- 이봉걸, “중국 12차 5개년(2011-2015) 계획의 주요 내용과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Trade Focus」 9집 14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0.11.
- 임재열·권중욱,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방안”, 「경영과학연구」 제30권, 한국경영과학학회, 2004.
- 전주원,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변화”, 「ISSUE PAPER」, 산업연구원, 2008.
- 정상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황과 시사점-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2006.10.
- 정상은·박승호, “변화하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CEO Information」 제562호, 삼성경제연구소, 2006.7.
- 정지현, “중부지역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10-2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8.
- 조현선,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 「기획조사」 06-009, KOTRA 동북아팀, 2006.2.
- 조현준, “중국 FDI 정책의 목표; 전개, 성과 및 과제”, 「국제지역연구」 14권 3호, 국제지역학회, 2005.
- 최국진, “한국기업의 대 중국진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탁세령,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진출 관련 시사점”, 「수은해외경제」 제25권 제6호 통권 제284호, 2006.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중국, <외국인투자 新규제안>발표 주요 내용”, 「해외경제·투자정보」, 2010.7.

황병우, “중국의 경영환경 변화와 지역 기업의 대응”, 「대구지역경제분석」 제207호, 대구은행, 2007.

황의택,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변화에 따른 한국기업의 투자전략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황재한,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와 대응전략”, 「동북아경제연구」 18집 3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6.

호경암,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의 현황과 향후 전망”, 「Korea-China Economic Forum」 제05-1호, KIEP 북경사무소, 2005.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http://mofcom.gov.cn>)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www.keri.koreaexim.go.kr)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무역학과	학 번	20087718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 립해도	한문 : 林 海 濤	영문 : Lin Hai-Tao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연락처	linhaitao840927@163.com				
논문제목	中國의 外國人投資政策變化에 따른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戰略 研究 A Study on the Investment Strategy of Korean Enterprise to China according to the Change of China's Investment Invitation Polic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11년 3월 일

저작자: 립해도 (인)

동의여부: 예(◎) 아니오()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